



탄탄한 조세재정
튼튼한 미래한국

공공경제

2022 AUTUMN Vol.11

기획특집 공공기관 효율화

혁신도시 박람회 광주·전남 혁신도시, 첨단기술과 문화 콘텐츠로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을 전하다



『공공경제』와 함께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공공기관 정책과 사례, 이슈를 바탕으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경제』가 기관과 정부, 국민 간의 공감과 혁신,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새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과 운영 방향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40년 역사와 관록을 자랑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의지, 민간 전문가의 헌신 그리고 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대 상황과 발전단계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할과 경영평가도 자연스럽게 진화해 왔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와 함께 경영평가의 내용과 운영방식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이며 공공기관 정책 기조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다. 공공기관 혁신의 주요 방향은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제도',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 내용과 강조점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업무효율성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이다. 강력하고 명확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계량지표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단기 과제로 인력·조직의 효율화, 중기 과제로 기능 조정, 민관협력 모델 창출이 제시될 것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당 과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가기준과 평가편람 작성 과정에서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정책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성 강화 취지로 강조됐던 사회적 가치 과제의 정비도 불가피해 보인다. 윤리, 안전, 환경 등 시대적 요구사항은 충실히 수용하되 기관 특성을 반영하는 고도화가 요구되며 기타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므로 기존의 경영관리 기능에 포함해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기존 과제의 폐지나 인위적인 축소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 창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300인 이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경영평가 등 관리권한을 주무부처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전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핵심 공통과제를 부여할 것인지, 자율·책임경영의 취지를 살려서 이사회와 기관장의 리더십을 보장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등이 예상되는 관심 사안이다.

평가단 운영에도 몇 가지 개선이 예상되고, 요구되고 있다. 과학적이고 엄정하며 효율적 평가를 위한 지원정보시스템은 평가자료와 보고서 탑재 기능을 넘어서 평가이력, 기관 핵심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의 확충이 필요하다.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기관과의 소통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면 실사와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익숙하고 편리한 비대면 화상회의는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다. 평가담당자와의 실무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원격지의 현장에 대한 화상 실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소통 등 활용 가능성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년 단위로 바뀌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 주기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공공정책 방향과 혁신에 대해 '어차피 올해만 지나가면, 몇 년 뒤 다음 정부에서는...'의 근거 없는 자조감에 빠지기 쉽다. 제목이 유사하고 방향이 익숙할지라도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추격자를 넘어서 선도자가 되어야 함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혁신과 경영평가도 창의적 발상과 과감한 도전이 요구되는 것이다.○



김완희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CONTENTS

공공경제

2022 AUTUMN Vol.11



표지 이야기

나주시 관광사진공모전에서 입선으로 선정된 김희정 님의 '영산강이 품은 나주시내 전경'입니다(출처 : 나주시).

발행인	김재진 KIPF 원장
편집인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편집위원	변민정 KIPF 정책사업팀장 장정순 KIPF 연구출판팀장
제작지원	유승현, 송경호, 소병욱, 선혜경
외주지원	임영현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등록일	2020년 5월 13일(세종,바00032)
디자인/제작	고려씨엔피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우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전 화	(044) 414-2415
이메일	soe@kipf.re.kr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구독료	권당 3,000원 (1년 정기구독 10,000원)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1005-103-961530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공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공공경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특집



- 08 정책리포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고재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장
- 12 전문가VIEW I
공공기관 기능의 민간경합성 판단 기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15 전문가VIEW II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출자회사 관리 방향
홍길표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19 Round Table
국가 R&D 체계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이번 「공공경제」
Vol.11은 어떠셨나요?

「공공경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아쉬웠던 점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셔서 담당자 이메일(soe@kipf.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독자분께는 보내주시는 연락처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 NOW



- 28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 30 **Trend Focus**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과 한계점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4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OECD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국가별 현황 소개
송경호, 선혜경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38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미래 핵심 성장동력산업 바이오헬스, 그리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김용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선임연구원
- 44 **혁신이야기 I_국립암센터**
메타버스 기반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과 운영
김성학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관리정책부 연구원
- 46 **혁신이야기 II_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의 분기점, '한국관광 데이터랩' 탄생 이야기
김영미 한국관광공사 관광빅데이터실장
- 48 **혁신이야기 III_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김대업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50 **혁신이야기 IV_한국중부발전(주)**
풍력발전 연계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드론 충전소 구축
나재범 한국중부발전(주) 수소사업실 차장

공공기관 TALK



- 54 **CEO인터뷰 I**
국민과 따뜻한 동행으로 미디어와 함께하는 삶에 행복을 더합니다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60 **CEO인터뷰 II**
세계 일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창업진흥원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용문 창업진흥원 원장
- 66 **혁신도시 박람회**
광주·전남 혁신도시, 첨단기술과 문화 콘텐츠로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을 전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 72 **잡(JOB)담 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육식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재지원부 과장
- 76 **잡(JOB)담 II**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지희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재개발처 과장
- 80 **나의 취업성공기 I**
유쾌한 반란
허성령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 비상보안과 대리
- 82 **나의 취업성공기 II**
모든 목표는 100m 달리기 아님 마라톤
이다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 주임



기획특집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주제로 정부, 전문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다루었다.

‘정책리포트’에서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와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 ‘전문가VIEW’에서는 공공기관 기능의 민간경합성 판단 기준과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 마지막으로 ‘Round Table’에서는 국가 R&D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정책리포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전문가VIEW I

공공기관 기능의 민간경합성 판단 기준

전문가VIEW II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출자회사 관리 방향

Round Table

국가 R&D 체계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와 방만경영 개선 -



고재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장



공공기관 스스로 강도 높은 혁신에 앞장서야 할 때

공공기관은 그간 경제발전 단계마다 에너지, SOC(사회간접자본),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도 정부 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는 현재 총 350개, 인력은 약 44만명, 예산은 761조원(2021년 결산기준) 수준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한편, 공공기관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비대해진 모습도 보인다. 그간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 5월 33.4만명에서 2022년 5월 44.9만명으로 11.5만명 증가했으며, 부채규모는 2016년 말 499.4조원에서 2021년 말 583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수익성은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악화된 모습이다.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2017년 13.5조원에서 2021년 0.7조원으로 대폭 하락했고, 수익으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공기업 수도 2017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유가 및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부채비율 등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상존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에 대한 언론, 감사원, 국회 등 외부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 약 절반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모회사 직원이 퇴직 후 낙하산 취업을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과도한 복지포인트 지급, 출장 신청하고 승진시험 준비하기, 성과급 등 보수 관리 부실, 정부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사내대출 지속 운영 등 방만경영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 6월 실시한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한국리서치)’ 결과는 공공기관 현황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일반국민 1,022명 중 63.8%와 전문가 97명 중 64.9%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71.8%, 전문가의 77.3%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혁 우선 과제로 국민은 ‘과도한 인력 및 복리후생 조정’(52.1%)을, 전문가는 ‘기능 조정’(57.1%)을 선정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커지는 만큼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바,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①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②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의 3대 축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축인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어 8월 18일에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9월 중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을 개방하고 중소기업 ESG 지원 등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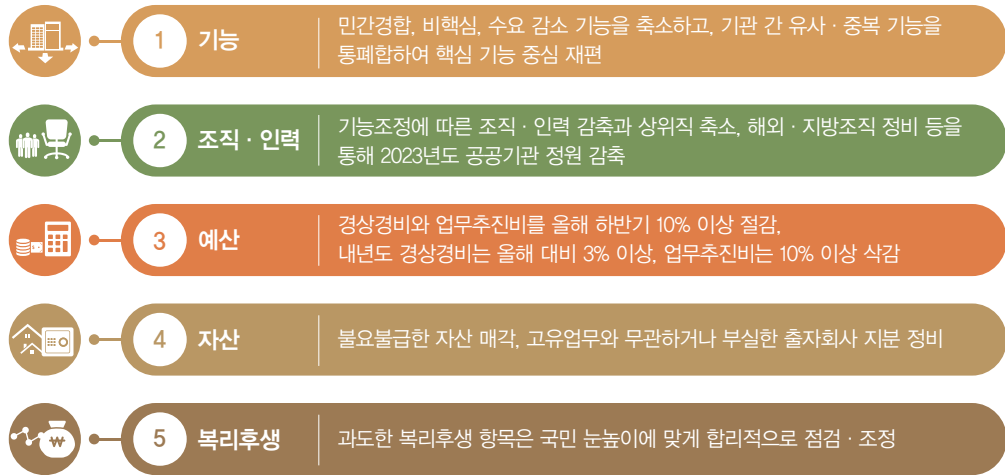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와 방만경영요소 정비의 핵심인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5대 분야의 효율화 과제를 제시한다. 각 기관은 이에 따라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T/F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첫째,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간경합, 비핵심 기능 축소 등을 통해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 사업 외에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한다.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기능도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기능은 통폐합해

그림 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야 한다. 기관별 기능 조정에 맞춰 조직과 인력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간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전혀 없으며, 이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도 명시했다.

둘째, 그간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한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일정 기간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지속될 경우 초과정원 감축 등으로 정·현원 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 조직 정비, 지원부서 및 파견인력 조정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셋째, 예산을 절감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2022년도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의 경우 올해 대비 경상경비는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자제, 단순 홍보성 광고비 및 기념품 편성 지양,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의 절감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해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과 공정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넷째, 불요불급한 자산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를 추진한다.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 등으로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숙소 및 사택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정리하고,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비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사의 경우 업무시설별 1인당 업무면적 등 기준면적 초과 시 초과면적은 축소하고, 업무 연관성이 낮은 옥외·부대시설 등은 매각, 임대, 민간개방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을 점검하고 적정수준으로 축소 및 정비한다.

과도한 사내대출, 해외파견 자녀 학자금 등 외부 지적이 있거나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항목 등 복리후생 항목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 공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350개 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기관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관별 혁신 T/F를 구성해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는 담당 1급을 팀장으로 하는 산하기관 혁신 T/F를 통해 소관 산하기관의 혁신계획을 점검 및 조정해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을 점검·조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여타 분야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혁신에도 이해관계기관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기관의 현황을 잘 아는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혁신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혁신

이를 위해 이번 공공기관 혁신은 기관별 특성에 맞춰 스스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추진해, 과거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한다. 또한,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관장 경영계약에 혁신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토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혁신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여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혁신 노력이 꾸준히 성과를 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계획 조정 및 실적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은 혁신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과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나갈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야 한다.○

공공기관 기능의 민간경합성 판단 기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왜 민간경합 기능을 중단해야 하나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주요 쟁점은 ‘민간경합 기능의 축소’일 것이다. 현재 민간 참여가 있거나, 없더라도 향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능을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왜 공공기관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가? 미래 경제성장의 원천은 중요소생산성의 증가인데 이는 대부분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의해 이루어진다.¹⁾ 성장은 적자생존의 생태계가 만드는 경쟁에 달려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독점이거나, 경쟁이 있어도 망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면 생태계가 훼손되어 그만큼 경제성장이 저해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생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소모되며 이로 인한 적자는 결국 후대의 주머니를 털게 된다. 정부는 민간경합 판정 기준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준별 해석과 적용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기준 1: 민간 경쟁업체가 있는가?

민간 경쟁업체가 있다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능을 중단해야 한다. 명백하고 간단한 기준이다. 기준 4에서 설명할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고려하면 된다.

공공기관 중에는 기관의 기본 미션과 관련성이 낮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골프장, 전시장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전시장의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댈 것이다. 그러나 그 시설을 매각하고 특정 분야에 대해선 사안별로 보조금을 주는 편이 낫다. 또 기관들은 공익사업 재원을 위해 수익사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차보조는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위해 자동차를 제조하고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그 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답이 궁금하면 북한을 보면 된다. 공익사업이 필요하면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의 책무성도 강화된다. 위 사업에는 기금이 설치되어 있어 수익사업을 중단하면 공익사업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 절감도 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공공기관의 시장잠식에 대해 관대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예산으로 할 일을 공공기관이 돈 벌어서 수행하면 결국 성장이 잠식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 김규일·박진호,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생산성 향상과 기업역동성」, BOK 경제연구, 제2020-9호, 한국은행, 2020. 4.

기준 2: 시장은 해당 재화·서비스 공급능력이 있는지?

향후 민간에 맡겨도 문제가 없겠는지를 묻는 기준이다. 발생가능한 문제의 첫 번째 유형은 시장의 실패이다. 예컨대 자동차 검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검사소가 합격을 남발하기 때문에 공단도 직접 검사를 수행하면서 민간업체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안전도 검사는 민간에 100% 넘겨야 한다. 안전도 검사에서 차주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민간검사소는 정비수요 창출을 위해 모두 차의 결함을 밝힐 유인을 가지고 있다. 시장실패가 없으므로 굳이 공단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반면 배출가스 검사에선 시장실패가 있다. 환경에 관심 없는 차주나 민간검사소는 모두 차의 결함을 숨길 유인이 있다. 민간의 배출가스 검사는 중단시키고 공공기관이 전담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민간이 전문성 부족으로 공급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독점 사업으로 운영하여 민간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공공기관의 해당 기능을 분할해 민간에 매각하면 된다. 민간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기준 3: 제공하고자 하는 재화·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성 도입이 가능한지?

시장실패도 없고 민간 역량도 되는데 경쟁 도입이 안 된다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가격 규제가 있는 경우인데 공공임대주택이 그 사례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가격에 비해 낮다 보니 민간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것이다. 이때 가격을 시장 수준으로 하면서 저소득층에게 주택바우처²⁾를 제공하면 민간 기업도 공공임대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바우처 방식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섞여 살게 하는 장점도 있다. 둘째, 수요가 너무 낮아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공공기관에 의한 공급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은 그 필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필수재인지 사치재인지가 판단기준이다. 예컨대 낙도에서 공공기관이 렌터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낙도에 대한 배편은 수요가 낮지만 주민의 교통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정될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공공 선사를 만들기보다는 가장 낮은 보조금을 요구하는 민간 선사에게 일감을 주는 최저보조금입찰제를 활용하면 된다. 단, 공급자 교체비용이 클 경우에는 공공기관 수행이 인정된다. 향후 가격을 자유화하면서 소비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든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정부가 민간에 보조금을 주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다. 이때 재정이 소요되긴 하나 어차피 공공기관 적자가 재정지출로 치환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적자에 비해 재정지출이 눈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경쟁 도입에 대해선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지

2)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만 주택바우처가 제공되나 이를 소득 2~3분위로 확대해야 한다.

적하고 싶다. 셋째, 정부 규제로 민간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전력판매 시장이 그 사례이다. 전력판매 시장의 경쟁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경쟁성 도입은 한 기관 내에서도 가능하다. 직접경쟁은 안 되더라도 KTX와 SRT처럼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은 시킬 수 있다. 자회사 전환 등 기관 내 비교경쟁 촉진방안도 검토할만하다.

기준 4: 공공기관이 공급할 경우 민간에 비하여 경쟁력 있는 요소가 있는지?

민간의 경쟁력은 가격과 상품의 질이지만 공공기관이 민간 대비 이런 경쟁력 우위를 갖추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사업이 나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면 이를 넓은 의미의 '경쟁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알뜰주유소는 주유소 가격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이 민간 대비 경쟁력을 갖춘 요소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인정해 주기보다 규제나 재정 등 정부 본연의 정책수단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유통구조의 불공정성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수익이 저조한 백화점까지 운영하며 판로를 돕는 것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국가재산의 낭비이다. 알뜰주유소는 주유소 간 담합조사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명백한 담합 정황³⁾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소극적이면서 주유소 운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정부의 편의주의이다. 반면 공공기관이 경쟁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 운영은 경쟁력 요소가 인정된다. 민간이 수행할 경우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를 민간에 매각하고 규제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 규제는 집행비용이 너무 크다.⁴⁾

맺음말

민간경합성 판정은 공공기관이 시장참여를 중단한 후 대안적 수단으로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그 대안으로 규제·단속, 경쟁 도입, 예산편성, 바우처, 최저보조금입찰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시장참여는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절감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시장참여를 중단하려면 주무부처 및 예산 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의하면 2022년 7월 4일 오전 8시 현재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의 4개 주유소 중 3곳의 휘발유 가격이 2,199원으로 동일했다. 이 중 2곳은 경유 가격까지 2,299원으로 일치했다. 주유소들이 가격을 독자적으로 책정했는데 1원 단위까지 같을 확률은 매우 낮으며 3곳 이상에서 같다는 것은 사실상 담합 정황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박진 블로그, 정부정책 뒤집어보기, <https://blog.naver.com/jinparkinkr>)

4) 예컨대 강원랜드는 출입일 수 규제, 음주자 출입금지 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민간에 맡길 경우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카지노 안을 다니면서 이를 단속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출자회사 관리 방향



홍길표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최근 현황과 문제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소 방만하게 설립된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을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한 경우가 있었지만, 구조조정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한 따름인지는 몰라도,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점검과 관리의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래 공공기관 출자회사란 공공기관이 사업상 필요한 부문에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를 의미한다. 다만, 구체적 요건과 하위 유형은 법령의 경우 자회사 위주로 규정하고, 그 외 자회사가 아닌 회사를 출자회사로 분류한다. 일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임원임명권 등 실질 지배력을 가진 회사를 자회사로 분류하며, 지분을 소유한 회사 중 자회사가 아닌 회사를 출자회사로 분류한다(나유성, 2016¹⁾).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4호)에 따르면, 출자회사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5호)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30억원 이상 출연하거나 총자본 비율의 10퍼센트 이상 지분을 출자한 다른 법인'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공공기관이 사업·경영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타 법인으로 규정하되, 관리목적상 일정 요건(지분 50% 이상 소유 또는 지분 30% 이상 및 실질 지배력 보유)을 갖춘 타 법인을 자회사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출자회사를 투자회사(또는 지분보유회사)로 지칭하고자 한다.²⁾

1) 나유성,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2) 「상법」상 '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다른 회사를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을 단순투자자와 일반투자, 경영참여 세 단계로 나눈다. 통상 자회사는 경영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경우 투자회사로 지칭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



알리오 공시자료에 따르면 외형적으로 공공기관 출자회사 수 자체가 무척 많으며, 동시에 2017년 대비 2021년 다소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의 경우 2017년 476개에서 2021년 638개로 1.34배(162개) 늘어났으며, 투자회사(자회사가 아닌 출자회사)는 2017년 936개에서 2021년 1,442개로 1.54배(506개) 늘어났다. 외형적인 수치만 보면, 매우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이 영위하는 본업 특성상 정상적인 사업과 투자활동의 결과

로 나타난 출자회사도 상당수이다. 우선 자회사의 경우에는 정책금융 준정부기관이나 금융 기타공공기관에서 본업인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투자사업의 결과로 외형상 자회사 숫자가 늘어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일부 자회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100% 자회사 설립, 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회사 설립 또는 지분 참여 등 사업성은 물론 효율성, 그리고 민간과의 경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많다.

한편 투자회사 수가 증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채권정리용이나 회생계획 집행용, 동반성장 차원에서의 소액 지분투자 등에 해당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투자, 민관협업 차원의 지역혁신사업 투자처럼 공공성, 사업성,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그 적정성을 점검해야 할 투자회사 사례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출자회사의 효과적인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모색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출자회사 관리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자가 그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들의 영향력 확대,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순응형 투자, 그리고 실적 제출을 위한 보여주기식 출자회사 신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출자회사 신설과 관련한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하자는 방안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필자도 기본적으로 이 방향성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회사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설 타당성 검토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설립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효과적으로 사전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5호) 제5조

(출자회사 등의 설립과 운영)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4호)에 이미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이나 정책 변화에 맞춰 규정을 개정하려는 노력, 주어진 규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만들려는 노력, 그리고 내부규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심의하고 점검 예외조항³⁾을 구체화하는 노력 등이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출자회사와 그렇지 않은 출자회사를 구분해 알리오에 공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들로부터 출자회사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배려하는 세심함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과 경영정보 공시 강화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예방, 모기관 임직원의 탈법적 출자회사 취업 방지, 사업·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출자회사 관리·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모기관인 공공기관에도 일정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출자회사 적정성 점검은 사업모델(Business Model: BM)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출자회사 적정성 점검 가이드라인을 지분비율이 아닌 사업모델 유형별로 나뉘어 하는 이유는 출자회사의 목적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통상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는 주로 모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추진상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그리고 민간의 기술·자본이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유성, 2016). 이는 출자회사 설립·운영의 목적을 설명하는 예시로, 왜 이 출자회사가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등을 잘 보여준다.

최근, 이러한 평가기준을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사업모델의 개념 및 평가모형이라 할 수 있다. 필자도 이전에 출자회사 적정성 실무 점검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활용했던 공공성, 사업성, 수익성 등 행정 분야에서 선호하는 일률적 기준으로는 다양한 출자회사의 유형과 그 성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다양한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몇 가지의 전형적인 사업모델 유형으로 나눈 후, 유형별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모형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3)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제8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㉔ 공공기관의 출자회사가 법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공공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 또는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7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소 엄격한 심의와 점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좁히는 것이 유용하다. 이 점에서 엄격한 심의·점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것이다.

예를 들어 모기관 지분율이 높은 '사업형 자회사 및 재출자회사'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다시 <해외사업용 자회사> 사업모델과 <신규 사업용(일종의 사업다각화) 자회사> 사업 모델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성과 평가기준과 효율화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수 지분을 갖는 '투자회사' 범주에는 사업목적이 뚜렷한 <사업형 투자회사> 사업모델, 투자가 아닌 다른 정책목표를 지닌 <사업형 지분참여회사> 등으로 구분해 차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 확대가 아닌,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한 <업무분사형 자회사> 사업모델은 모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특정 업무를 전문성 제고, 효율적 운영 등의 목적에 따라 해당 업무와 함께 이 일을 수행하던 직접고용 인력을 분사시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점검하고 평가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사업모형은 지난 정부에서 부각된 <정규직 전환 목적의 자회사> 사업모델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이 기존의 간접고용 대상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344개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만 3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만여명은 자회사 설립방식으로 전환했다(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기준, 8차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자료). 한편 「2021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고용노동부, 2022)를 따를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방식을 자회사로 선택한 공공기관은 지방 소속 8개를 제외하면 총 78개(공기업 27개, 준정부 21개, 기타공공기관 등 30개)이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모회사인 경우라도 지분율이 100%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규직 전환 목적의 자회사> 사업모델의 경우, 현시점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대형 공기업을 중심으로 인원이 1천명 넘는 대형 자회사도 존재하지만, 출연연구기관 등 중소형 기관의 자회사는 100명이 채 안 되고, 심지어 50명 미만인 경우도 있어 업무의 전문성 제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 안정성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1년 정규직 전환 자회사 실태 평가 결과, D등급 이하 기관은 36% 수준이며 주로 이들 중소형 기타공공기관에서 나타났다. 자회사 운영방식의 적정성 문제는 한편으로는 모기관과의 수의계약이 포함된 경영 안정성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 자체가 과거 민간 위탁을 통해 수행됐다는 점에서 민간경합성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러한 사업모델상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과 자회사의 자체적인 효율성 강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책 차원에서 공공부문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 SSC)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 R&D 체계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임홍래 그동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과 인수위 등에서 R&D 투자 전략의 부재, 질적 성과 부족이라는 국가 R&D 추진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국가 R&D 혁신의 성과는 무엇이며, 비효율적 요소는 무엇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병원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체계에서 양적, 질적 차원의 비효율성은 지난 20년 이상 지적되어온 것으로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국가 R&D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슈가 제기된 것은 그만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만, 효율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만큼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지표를 통해 판단하는가에 따라 국가 R&D의 효율성 여부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R&D 투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로 알려져 있으며,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역시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러한 결과는 R&D로 인한 효율성 수준을 피상적으로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 연구자들 간에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기대에 비해 '저효율'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01년 「과학기술기초법」 제정 이후, 국가혁신시스템의 주요 요소는 대부분 정비되었지만 여전히 선형 혁신모델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특정 요소를 원인으로 지적하기 힘든 상황에서 비효율성에 대한 원



일자
2022년 8월 29일(월)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Webex)

사회
임홍래

토론자
윤지웅, 김창완, 박병원, 황인영

정리
유승현

Round Table 원고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및 각 참석자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인 분석의 출발점은 추적형 국가혁신시스템의 역사적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황인영 성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가 R&D의 효율성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혁신지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혁신 효율성은 세계 7위입니다. 개별 지표들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R&D 효율성의 대표적 지표는 논문 피인용수와 기술무역수지 등입니다. 지난 8월 일본 문부과학성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는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상승했습니다. 기술무역수지비 역시 1981년 0.11에서 2020년 0.75로 장기적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중복투자는 비효율적 요소로 자주 거론되어 왔습니다. 물론,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의 경우 효과성 관점에서 중복투자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국가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 관점에서만 재단하기 어렵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미국 달 탐사 시기에 국가 R&D 투자비율이 급증하면서 R&D 효율성이 많이 감소한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탈추격형을 지향하는 분야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 간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완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우리나라는 민간 분야의 저조한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심화된 기술 분야에 국가 주도로 적극 투자함으로써,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연구개발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진입한 현시점에서 예전과 같은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2020년 기준 민간 연구개발비(약 71조원)가 정부 연구개발비(약 22조원)의 3.2배에 달하는 등 민간이 산업 분야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세계 2위(2020년 기준 4.81%)에 달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비효율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공공과 민간 간 투자 중복, 수행 주체별 역할의 중복, 투입 중심의 예산 배정 및 연구관리체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임흥래 국가 R&D를 통해 앞서 언급된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창출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혁신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R&D 관리체계(기관, 시스템, 규정), 관리방식(사업, 과제, 성과평가), 수행 주체(이공계 인력,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의 관점에서 어떠한 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임홍래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창완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선임연구위원



황인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센터 부연구위원

윤지웅 먼저, ‘정부 R&D 투자의 비효율성’이라는 문구 속에는 재정투입 대비 결과물(output)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간과되는 것이 투자에 대한 위험(risk) 또는 불확실성(uncertainty)입니다. 특히 국가 R&D 투자의 경우, 복지 등 다른 재정 투자에 비해, 속성상 내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투자에 해당합니다. 이를 같은 잣대로 관리한다면,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 확률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국가 R&D를 위한 혁신전략을 국가 차원의 탐색적 접근(exploration)과 활용적 접근(exploitation) 등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색적 접근 전략은 정부가 미래를 위해 기초연구 등을 연구자의 자율에 맡기는 전략이고, 활용적 접근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분야(예를 들어 전략기술, 공급망 관련)에 대한 명확한 미션을 부여함으로써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병원 연구수행기관의 예산, 인력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자율성이 효율성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의 연구기관들이 국가 R&D의 효율성보다 기관의 자체 성과에 집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관의 관리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거버넌스 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거버넌스 개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경험상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국회, 정부, 감사원의 과도한 평가와 관리가 혁신을 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혁신시스템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각 연구수행 주체(이공계인력, 대학, 출연연, 기업)들이 연구의 미션,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인식의 격차를 줄이고, 개인 연구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지원 시스템을 팀/연구소 단위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혁신성이 부족한 연구는 과감히 퇴출해야 합니다. 해외 혁신네트워크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좀 더 정확하게는 흡수 및 확산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김창완 우선 부처별 예산 배정에서 벗어나 예산 집행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국가안보, 보건의료와 같은 공공부문에 90% 이상의 예산을 집중해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처별 예산 배정으로 인해 민간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분야에도 정부 예산이 배정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 주도로 예산 집행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처별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두고 기획부터 성과관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여 예산과 인력의 중복이 발생하는 현재의 부처별 연구관리체계를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부처 연구관리통합시스템(IRIS)을 잘 활용하면 부처별로 연구관리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체계에서 벗어나 통합 및 협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수행 주체별 역할을 정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출연연의 경우,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등으로 인해 고유 임무와 관련이 낮은 과제를 수탁하는 경우가 많고, 기관보다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출연연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 임무를 정립하고 기관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응용·개발 단계의 연구비가 전체 연구비의 약 62%(미국의 경우 약 37%)를 차지하는 등 미국과 비교하면 응용·개발 단계 연구에 치우쳐 있습니다. 대학이 기초연구의 산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흥래 혁신과 도전을 통해 창의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관련 규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전문가 입장에서 느끼시는 R&D 관련 규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윤지웅 우리나라 국가 R&D의 규제 수준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소 행정편의적으로 촘촘한 사전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엄격한 사전규제가 갖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진입규제의 경우,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법규로 이미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규제대상으로 간주합니다. 기업이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규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혁신 측면에서는 단점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업의 자유 등 경제주체의 권한을 억제함으로써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과 IT산업 등 첨단산업의 경우 사전규제가 혁신을 방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전규제는 시장의 수요와 변동에 반응하여 민간 경제주체의 대응방식을 사전에 제한해 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병원 국가 R&D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각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여, 기계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가 R&D 사업과 과제의 분류 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연구자의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젝트 관리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및 국회의 관리방식은 성과계약제 방식으로 전환해 성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완 과거 정부부터 연구자 중심의 규제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성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별 평가 폐지는 부처의 대형 사업 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의 사업 참여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를 위한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최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개선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영 우리나라 R&D 규제 환경은 최근 수년간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등 입법방식의 전환과 총체적 규제입증책임제도, 규제 샌드박스 등에 따라 R&D뿐만 아니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부처별로 서로 다른 규정과 시스템이 일원화되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로 제언을 드리자면, 규제샌드박스는 사실상 R&D 실증 수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샌드박스를 통해 충분한 효용이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실제 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입법 시 잠재적 규제 요인들을 사전에 스크리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지원제도라도 생각지 못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혁우, 2009). 따라서 법령 제·개정을 위한 상시 자문이 가능하도록 R&D 규제 사전 스크리닝 전문센터 또는 규제 Q&A센터를 운영한다면, 불필요한 규제가 생겨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홍래 국가 R&D 체계 확립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늘리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연구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및 각 주체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윤지웅 성과확산은 연구개발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고전적인 선형모형에 적합한 분야와 비선형모형에 적합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성과확산 전략을 관리하다 보면, 연구개발을 통한 우연한 발견(serendipity)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확산에 대한 지표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관리하면, 연구자와 연구개발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히 도전하기보다는 불확실성 혹은 위험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창완 오랜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성과의 활용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저조한 성과 활용의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개별 연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입니다. 현재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자 중심의 기획으로는 해당 연구의 최종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연구 성과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관련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노력이 부족합니다.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

정입니다. 특히 비예타 사업의 경우, 부처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타 부처 예산 요구와의 중복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의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사현안에 대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인영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문제해결 도구로서의 과학기술이 강조되고 임무지향 R&D가 대두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Horizon Framework Programme에서 임무지향 R&D를 DARPA 스타일 R&D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탈추격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서 과감히 DARPA 스타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션으로 선정된 분야에 한해 실패를 용인하고, 전략적인 중복투자를 허용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투자를 하는 등 탈추격형으로 전환을 하되, 미션을 달성한다면 탈추격형으로의 전환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학·연 협력은 전보다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대형 사업의 경우 정부 재원을 기반으로 출연연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연연이 주도하는 대형 R&D 사업에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기술이전을 통한 민간 기술역량 배양이 필요합니다. 출연연 기술이전 조직을 획기적으로 전문화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인력 순환은 지양하고,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연구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원 그동안 연구개발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에 더해 지속가능성 확보, 기술주권, 회복력 확보 등 다중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 및 혁신이 현재 경제, 기술, 산업 분야의 정책뿐 아니라 복지, 국방, 환경, 에너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의 기본 요소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책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이 연구자, 기업 등 경제활동의 주체들만의 참여로 한정됐지만, 시민들의 참여 없이 미래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정책을 추진하려면 산업구조의 전환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행태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문화, 에너지, 환경, 복지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한 부처, 한 행위자 그룹에만 속한 이슈는 없습니다. 이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 행위자의 역할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연구개발에 있어 기술혁신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완성된 정책보다는 실험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공공부문 전문성 확보는 전제 조건입니다. 각 연구개발 행위자(학계, 기업, 연구계)의 협업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공공기관 NOW

〈공공기관 NOW〉는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국내외 동향 및 기관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혁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공정책 동향’에서는 공공기관 정책 관련 보도자료와 현안을 다루고, ‘Trend Focus’에서는 2022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과 한계점을 소개한다. ‘글로벌리포트’에서는 OECD 자료를 토대로 한 국가별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현황을 소개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과 주요국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정책을 사례로 제시한다. ‘혁신이야기’에서는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고민과 노력, 성과를 우수사례로 다루었다. 이번 호에는 국립암센터의 메타버스 기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빅데이터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한국중부발전(주)의 수소드론 충전소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Trend Focus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과 한계점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OECD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국가별 현황 소개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미래 핵심 성장동력산업 바이오헬스, 그리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혁신이야기
국립암센터 /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중부발전(주)





정책동향 소식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습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전체 공공기관(350개)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기능) 민간경합 기능,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축소·조정
- ② (조직·인력) 2023년 공공기관 정원의 원칙적 감축
- ③ (예산)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 10% 이상 절감
- ④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 청사 활용도 제고
- ⑤ (복리후생)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기관,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새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3대 혁신과제로 '생산성 제고'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생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와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각각 발표했으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2021년 말 정원 기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개 기관의 유형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고, 경영평가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며 재정운영 자율성이 확대되는 등 주무부처와 해당 기관의 권한이 확대됩니다. 둘째, 기관 유형별로 관리를 차별화하는 내용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출자·출연 사전협의 방식을 개선하며, 경영평가 때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은 연구개발목적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으로 나뉘어 각 기관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를 추진합니다. 셋째,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인사·조직 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



입을 촉진하고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할 예정이며,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으로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을 내실화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2026년 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수립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 바 있습니다. 선정 재무위험기관은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위해 경영효율화 등 5개년에 걸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39개 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자산매각 4.3조원, 사업조정 13.0조원, 경영효율화 5.4조원, 수익 확대 1.2조원, 자본 확충 10.1조원 등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 및 자본 확충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 절감, 수익 확대, 자본 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은 2022년 증가 후 완연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며, 2026년에는 265.0%로 2021~20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당시 부채비율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의 경우도 부채비율은 2022년 187.6%로 급증한 후 재정건전화계획 추진 등으로 인해 2026년 169.4%를 보이며 하락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부채규모도 자산매각, 사업·투자계획 조정 등을 통해 차입규모를 최소화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부채규모 증가 수준 71.8조원에서 관리될 전망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유가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0.1조원이 감소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8.5조원의 흑자를 보일 전망입니다.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 출자회사 관리 등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과 한계점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출

국회는 2021년 5월 1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8월에 이미 국회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다양한 사례 중에서도 여기서 말한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은 특히 검사들의 범죄행위가 강조됐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주식대박 검사’ 등과 같은 이름으로 검사들의 범죄행위가 보도됐다. 그런데 검사가 금품을 받았음에도 「형법」상 뇌물죄의 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까지 나왔으며, 이러한 벤츠 검사의 무죄판결이 일명 ‘김영란법’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요청됐다. 그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김영란 위원장)



는 2013년 부패한 공직문화를 척결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만들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 과잉입법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 법률안이 그간 「형법」상 뇌물죄로 규제할 수 없었던 금품 수수까지도 규제하고, 그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부처 간 검토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국회, 정부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차에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제야 국회는 국민 여론을 외면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이 법률안 심의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4년 5월 27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와 같은 공직부패를 기존의 법률로 막을 수 없었는지를 문제 삼았다. 당시 한 의원은 기존 법률로도 공직부패를 막을 수 있기에 때문에 새로운 법률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장은 세월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관피아 문제, 스폰서를 통해 향응을 베푸는 행위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로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정무위는 무엇보다 정부안에 있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정부안에 있던 이해충돌 방지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 전부 포함된 것이었다. 그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예컨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집에서 전세를 살던 중 그 집을 매수하려는 경우에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관계에 해당하므로, 그 부동산 매매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거론하면서 이는 지나친 과잉규제라고 했다. 결국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나중에 심사하기로 미뤄버렸다. 이처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이해충돌 방지 관련 사항이 제외된 상태로 입법화가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2021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국회는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섰다.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LH 임직원과 같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제정했다.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2021년 4월, 법안을 심사할 때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법률제정 반대의견을 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에 대응해서 제정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무려 189만명의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LH 사태가 일어난 직후라고 해서 공직의 투명성만을 강조하고 이를 극대화하느라고 행정의 효율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규율하는 법률과 시행령이 이미 5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법률을 덜컥 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자, 수많은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법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

「이해충돌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④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⑥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⑦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⑧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이 「청탁금지법」과 함께 제정되었다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였을지도 모른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듯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학과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그 적용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앞서 「청탁금지법」이 사립학교와 언론기관까지 적용대상으로 하여 격렬한 논란을 야기했던 경험을 참고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럽사리 제정되었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문제점도 보인다.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직무 관련을 갖게 될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적이해관계자’란 공직자의 가족은 물론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포함된다. 다만, 퇴직공직자의 요건을 2년보다 연장하고, 퇴직한 공직자와 ‘같은 부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같은 기관’으로 범위를 넓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다.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있듯이,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기존의 법률에 있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로 보기 때문에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서 수사나 재판·심판 등의 직무를 행하는 전·현직 공직자 간의 전관예우 등 공직사회의 부패는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고위공직자가 민간부문에서 활동하다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공직자로 임용된 경우, 그간의 활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가족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누락됐다. 만약 위반 사실이 발견될 때 임용의 효과에 대한 논란

이 예상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직자가 관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공기관이 직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 종이나 필기구를 사적인 용도에 이용하는 것은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 2002년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대법원장 원탁회의에서 채택된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역시 “법관은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법원 이름이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수 없다. 여기서 미공개정보까지도 포함시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보다 그 범위를 대폭 넓힌 특징도 있다. 그런데 재직 중인 공직자가 장차 취업하게 될 기관이나 기업체를 위하여 시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은 없다.

공직자가 장차 취업처를 물색하여 그 기업체를 위하여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체에는 퇴직 후 취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는 전 국민적 관심이 컸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은 이와 다르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고 하여 곧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청렴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해야 한다.○

OECD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국가별 현황 소개



- * 본 원고는 OECD가 발간한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A Compendium of National Practices 2021」(이하 '2021 Compendium')과 「Organising the State Ownership Function」(2020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 * 참고로 2021 Compendium은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가 번역하여 2022년 6월 발간함(『2021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국가별 현황』)

송경호, 선혜경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공기업은 한 국가의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경제 전반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효율성,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소유권 기능(ownership function)의 행사는 매우 중요하다. OECD는 2005년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공기업 소유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근간으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제정해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소유권 기능을 행사하는 중앙집중형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공공경제』 Vol.11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다양한 국가 소유권 모델을 소개하고, 주요국의 공기업 소유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 소유권 기능

공기업 소유권 기능(ownership function)이란 공기업 최고이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이사 선임, 경영목표의 설정 및 모니터링, 정부 소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책임 및

관리운영능력 등을 의미한다. OECD는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2015)과 「2021 Compendium」에서 공기업 소유권 기능은 첫째, 행정부 내 권한 행사 주체와 수행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하고, 둘째, 단독 소유권 담당기관에 집중시키거나 불가능할 경우 조정기관(Coordinating agency)을 통해 행사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주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공기업 소유권 행사 유형

OECD는 [그림 1]과 같이 공기업 소유권 모델을 중앙집중화 정도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대로 공기업에 대한 국가 소유권 형태가 중앙집중형 또는 조정기관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다양한 소유권 구조와 지배구조 방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

[그림 1] 52개 조사대상국의 공기업 소유권 모델 유형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국가별 현황」, 2022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

펴보면, 공기업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거나 정부 차원에서 공기업을 감독하는 중앙 조정기관을 설립하는 국가가 조사대상국(52개) 중 60%를 차지한 반면, 조사대상국 중 17%는 주무부처나 해당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의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분산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공기업 소유권 모델별 적용 국가 사례

1. 중앙집중형 모델(Centralised model): 프랑스

프랑스는 경제부 산하 중앙행정부서인 공기업관리청(L'Agence des participations de l'État: APE)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 경영 자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주무부처가 행사하는 감독 또는 규제와 구별되는 공기업관리청의 고유한 기능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특정 공기업은 주무부처가 감독하기도 한다(예: 청소년 문화패스(Pass Culture), 국립 방송아카이브(INA), 산림청(ONF)).

공기업관리청의 역할과 관련해 개별 공기업의 경영목표 설정은 기관별로 다르며, 목표 설정 시 여러 기관이나 부처가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 이사 선임을 위해 선별된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 후보군(portfolio)'을 운영하며 경제부 장관은 이사회 후보군 중 1명 이상의 정부 대표 이사(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2. 이중트랙형 모델(Twin track model): 벨기에

벨기에에는 FPIM(Federale Participatie-en Investeringsmaatschappij, 연방지주투자사)와 재정부가 공기업 소유권 기능을 행사한다. FPIM은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국영 기업으로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있으며, 자체수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하거나 연방지주회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한 지분 취득 업무를 수행한다.

벨기에의 공기업은 FPIM의 감독을 받는 상업적 기업(commercial entities)과 정부의 감독을 받는 자율적 공기업(autonomous public enterprises)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자율적 공기업으로 지정된 SNCB(벨기에 국영철도), Infrabel(열차네트워크관리공사), Belgocontrol(벨기에 항공관제소), bPost(벨기에 우정사업본부), Proximus(벨기에 통신회사) 등 5개 기업은 상업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특정 거버넌스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이다. 일부 공기업 경영목표는 전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수립하고, 나머지 경영목표는 개별 부처에서 수립하고 있다. 공기업 이사는 2016년 1월 12일 시행된 「December 2015

LAW]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때 벨기에 정부는 소유 지분에 비례해 이사 후보자를 지명위원회에 추천할 권리를 갖는다.

3. 분산형 모델(Decentralised model): 일본

일본의 공기업 소유권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MOF) 내 금융국과 국토교통성(MLIT) 내 민간항공국 및 일본철도운수기구(JRIT) 등이 있으나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JT)와 2개 공항공사 등에 대한 관리·규제 기능을 수행할 뿐, 기타 공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갖지 않는다. 또한 담당국 내에서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와 소유권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수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또한 일본 공기업의 경영목표 설정과 관련한 별도의 소유권 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공기업 이사의 지명과 선임은 「회사법」 조항이나 기타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향후 계획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정책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시장과 일반국민에게 국가가 소유주로서 공기업 운영의 전반적인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고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공기업 소유권의 주체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2021 Compendium」 보고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모든 OECD 회원국과 G20 회원국, 기타 공기업작업반 회의의 정기 참여국을 비롯한 총 54개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OECD는 국가별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관련 최신 동향과 정확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산업 바이오헬스, 그리고 첨단바이오횰약품

코로나19와 바이오헬스, 그리고 질환 완치가 가능한 치료제의 등장

불과 10여 년 사이 우리는 기술 혁신이 일상을 얼마나 빠르게 바꾸는지 체험했다. 스마트폰과 SNS의 등장으로 대화 방식이 변했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AI 등 혁신 기술들은 이미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헬스케어 분야도 마찬가지다. 유전자 분석 및 편집, 디지털 헬스케어, AI 진단 같은 기술 혁신에 따라 질환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백신·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산업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국민 관심도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신약 개발 역량이 국가 안보, 경제성장 차원에서 다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여러 유형의 의약품이 있지만 가장 혁신적이며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분야가 세포·유전자 치료제(cell and gene therapy)로 대변되는 첨단바이오횰약품이다.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승인된 치료제 수가 적어 사람들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의학적 중요성과 가치는 매우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에밀리 화이트헤드(Emily Whitehead)라는 소녀이다. 이 소녀는 혈액암 판정을 받고 생존율이 떨어져 가족으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마저 어려워 2012년 세포·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10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았는데 이때 투여된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2017년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CAR-T세포(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킴리아(Kymriah)이다.



김용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선임연구원



킴리아 임상시험 성공사례 Emily Whitehead(사진제공: 에밀리 화이트헤드 재단 페이스북, www.facebook.com/EWhiteheadFdn)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질환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환자와 질환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리아를 비롯해 대표적 희소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Zolgensma) 같은 치료제들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질환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다.

NIH(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6,500개 이상 희소질환 중 치료법이 존재하는 질환은 250여 개에 불과하다. 현재 치료제들은 척수성근위축증, 혈액암 등 일부 질환에 한정되어 있지만 전 세계 기업과 정부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고, 다수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세포·유전자 치료제(사진제공: Fierce Pharma, Medigate news, Sarepta therapeutics 순)

첨단바이오횐약품 개발 경쟁과 오픈 이노베이션

통계와 연구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제약산업 구조는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희소질환, 암 등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 항암제 대비 표적 정확성이 높아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교적 최근인 2016년·2017년부터 승인되고 있어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초기 단계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는 글로벌 강자가 없는 블루오션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출시 건수 기준(2020년) 전체 의약품의 1%에 불과한 데 비해 임상 파이프라인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이는 글로벌 제약기업은 물론 유전공학 등 BT(바이오 기술)의 발전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예로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mRNA(메신저리보핵산)도 RNA 치료제 기술의 한 유형인데, BioNTech(바이오엔테크)와 Moderna(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전까지 개발 제품이 없던 바이오 기업이었다. 특히, 유전자 편집이 필요한 분야는 고도의 R&D 역량이 필요하여 초기 개발 과정에는 바이오 기업이 강세를 보인다. 실제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 대부분의 원천기술은 Kite Pharma(카이트 파마), Juno Therapeutics(주노 테라퓨틱스), Ionis Pharmaceuticals(아

〈표 1〉 FDA 승인 세포·유전자 치료제 현황

기술	의약품명	승인기업(인수기업)	적응증	승인
Gene modified Cell (유전자 변형 세포)	Kymriah	Novartis	백혈병	2017년
	Yescarta	Kite Pharma (Gilead)	림프종	
	Tecartus		빈혈	2020년
	Breyanzi	Juno Therapeutics (Celgene → BMS)	빈혈	2021년
	Abecma	Celgene (BMS 인수)	골수종	
Gene(유전자)	Luxturna	Spark Therapeutics (Roche)	망막변성	2017년
	Zolgensma	AveXis (Novartis)	근위축증	2019년
RNA	Kynamro	Genzyme (Sanofi)	고지혈증	2013년
	Exondys 51	Sarepta Therapeutics	근위축증	2016년
	Spinraza	Biogen	근위축증	
	Tegsedi	Ionis Pharmaceuticals	신경질환	2018년
	Onpattro	Alnylam Pharmaceuticals	신경질환	
	Vyondys 53	Sarepta Therapeutics	근위축증	2019년
	Waylivra	Ionis Pharmaceuticals	고지혈증	
	Givlaari	Alnylam Pharmaceuticals	포르피린증	2020년
	Oxlumo		신장결석	
	Viltepso	Nippon Shinyaku	근위축증	
	Leqvio	Novartis	고지혈증	2021년
	Amondys 45	Sarepta Therapeutics	근위축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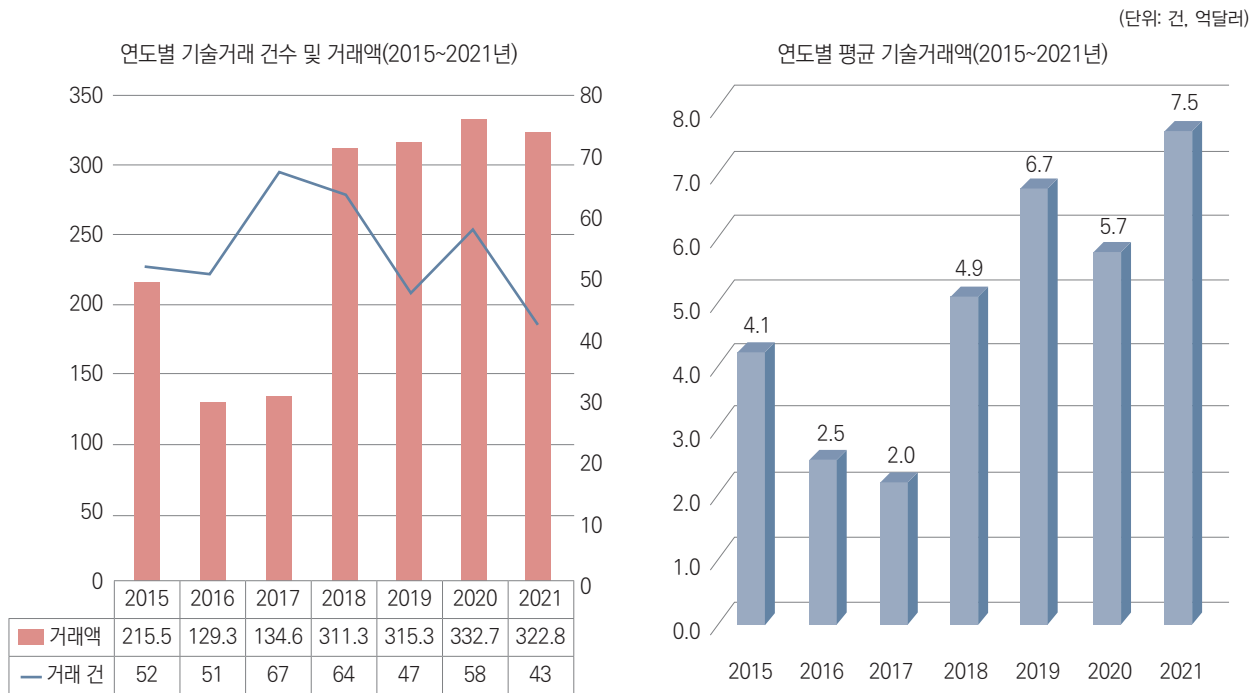
자료: Evaluate Pharma(2022. 2), 김용민(2022)

이오니스 파마슈티컬스), Alnylam Pharmaceuticals(앨라일램 파마슈티컬스) 등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했다.

하지만 혁신 신약 개발과 상업화에는 매우 높은 리스크가 따른다. 가장 많은 투자를 요하는 임상 단계는 물론 생산·승인 후에도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아무리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이라도 신약 개발 전체 과정을 수행할 때 자원과 역량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기업도 후보물질 발굴 등 초기 연구부터 수행하는 기존 R&D 방식의 효율성·생산성 이슈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 수요를 기반으로 협력적 R&D를 수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술의 외부 도입 및 인수합병(M&A) 등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개발의 성공률은 기존 폐쇄형 모델 대비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이 제약업계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인식되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5년(2016~2021년)간 기업들이 세포·유전자 치료제 기술 도입에

[그림 1] 세포·유전자 치료제 연도별 기술거래 규모



자료: Evaluate Pharma(2022. 2), 김용민(2022)

투자한 금액은 약 1,762억달러 규모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기술거래가 활발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기업들의 M&A 규모도 총 145건, 4,013억달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BMS(Bristol Myers Squibb,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 Takeda(다케다제약) 등 합성의약품 중심 기업은 물론 Roche(로슈), Sanofi(사노피) 등 바이오의약품 중심 기업들도 M&A에만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세포·유전자 치료제로의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주요국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정책

제약산업 선도국들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규모 R&D 프로그램 추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바이오헬스 R&D를 총괄하는 NIH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투자액이 2022년 한 해에만 73.4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2021년에는 희소질환 대상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해 8천만달러 규모의 민관협력 프로그램인 BGTC(Bespoke

Gene Therapy Consortium)를 출범했는데, FDA, NIH 등 정부기관과 Pfizer(화이자), Biogen(바이오젠) 등 기업이 참여해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DARPA(미국 방위 고등연구계획국)를 벤치마킹해 고위험·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의료고등연구계획국)를 설립하고 혁신 프로젝트 범위에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포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

EU는 범유럽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의 일환으로 유럽혁신 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를 신설(2021년)하고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고위험·도전적 연구에 10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협력 혁신 신약 R&D 프로그램 IMI(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를 통해 ARDAT(Accelerating R&D for Advanced Therapies), T2EVOLVE 등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다국적 R&D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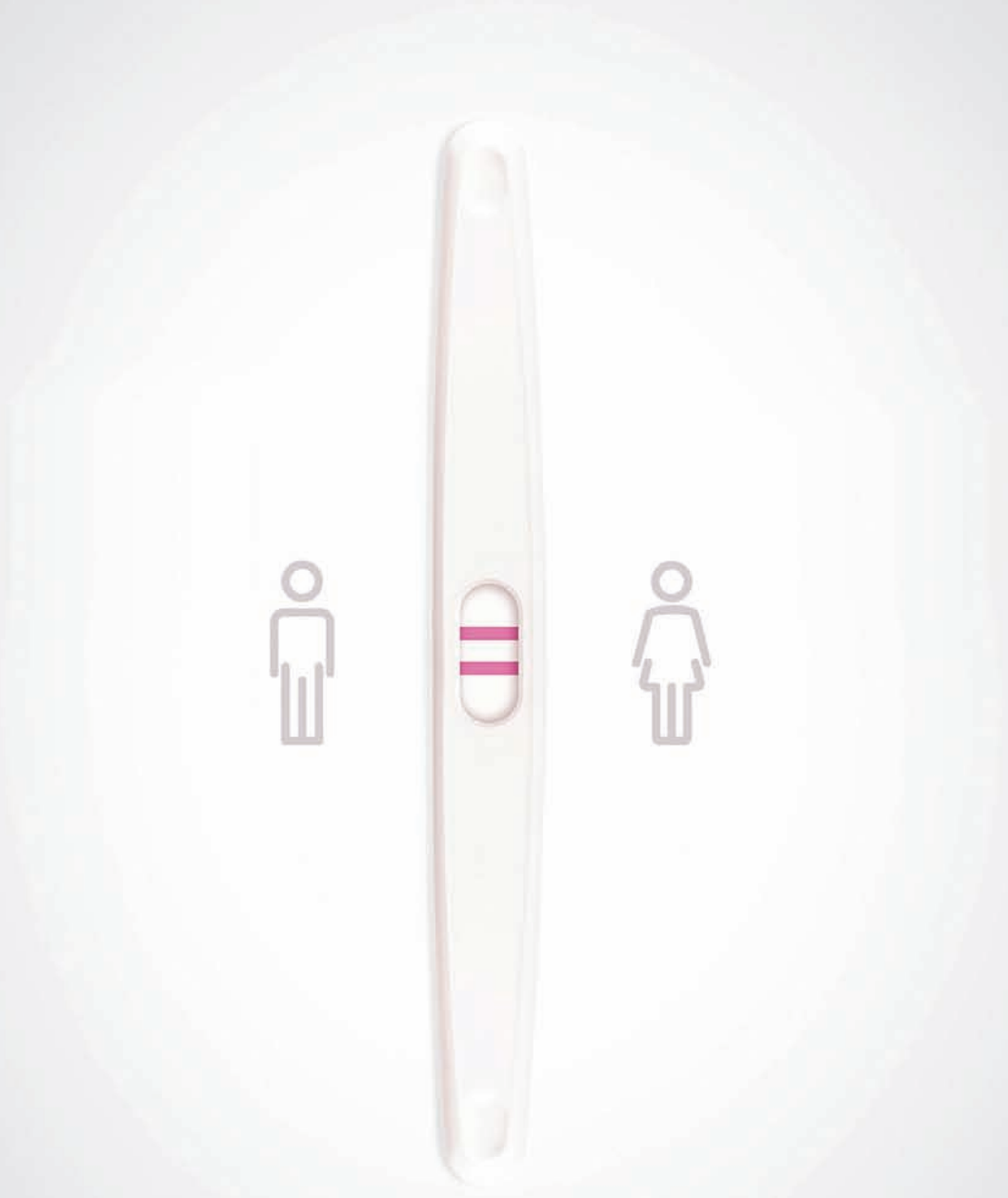
정부도 2000년대 초반부터 세포·유전자 치료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첨단재생의료 분야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첨단재생의료기술의 전주기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되어 ‘국가신약개발사업’과 함께 세포·유전자 치료제 R&D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2019년)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2020년) 등 범정부 차원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세포·유전자 치료제도 핵심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선도국으로의 도약, 지금이 골든타임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대부분 희소질환에만 사용되고 치료제가 수억원 이상 고가이다 보니 국민에게는 아직 낯설지 모른다. 의학적 타당성은 물론 비용효과성도 고려해야 하는 보험급여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요소도 많다. 하지만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다양한 질환으로 개발되고 있고 보험 적용도 정부에서 점진적 급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의료적·산업적 가치와 중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만 국내 기업들도 R&D 투자를 늘리고 정부도 중장기 정책 지원을 통해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개발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현시점에 정부와 기업이 역량을 집중해 우리나라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선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육아부담
육아휴직
동등하게

육아는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는
행복이자 권리입니다

01

국립암센터

메타버스 기반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과 운영

암케어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지역사회로의 확산



김성학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관리정책부 연구원

뉴미디어와 컴퓨터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의료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 역시 활발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의료 분야에서도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립암센터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대면·비접촉 생태계 조성을 시도해왔다. 국립암센터는 C-P-N-D(Contents-Platform-Network-Device) 관련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메타버스 디지털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물로 XR 기반 의료·헬스케어 특화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

암케어 디지털 플랫폼의 개발

플랫폼 초기 모델은 총 4개(다학제 콘퍼런스, 장루 환자 케어, 환자와 환자 가족 돌봄, 전문인력 실습 훈련)의 XR 기반 하위 플랫폼으로 이뤄져 있다. 하위 플랫폼을 통해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실시간 비대면·비접촉 협의 진료가 가능해졌다. 비정기 상담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부의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가상의 교육환경과 심리적 안정을 도

모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그리고 호스피스 전문인력에 실시간·실감형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암케어 디지털 플랫폼의 지역 비대면·비접촉 인프라 구축

국립암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비대면·비접촉 디지털 콘텐츠 육성사업'을 통해 암케어 디지털 플랫폼인 '닥터 메타(Dr. Meta)' 개발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암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닥터 메타' 서비스를 보급하고, 비대면·비접촉 인프라를 구축한 후 국립암센터와 연계·운영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기술과 관련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는 강원지역암센터(강원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부산대학교병원), 제주지역암센터(제주대학교병원), 대구경북지역암센터(칠곡경북대학교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총 6개 지역암센터와 협업해 각 지역암센터가 XR 관련 장비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각 기관 담당자와 의료진을 교육하며 인프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줬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암케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플랫폼별 전체 이용자의

60% 이상이 해당 플랫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대면 의존도가 높은 의료 분야에서 비대면·비접촉 서비스인 암케어 디지털 플랫폼이 암 환자의 편익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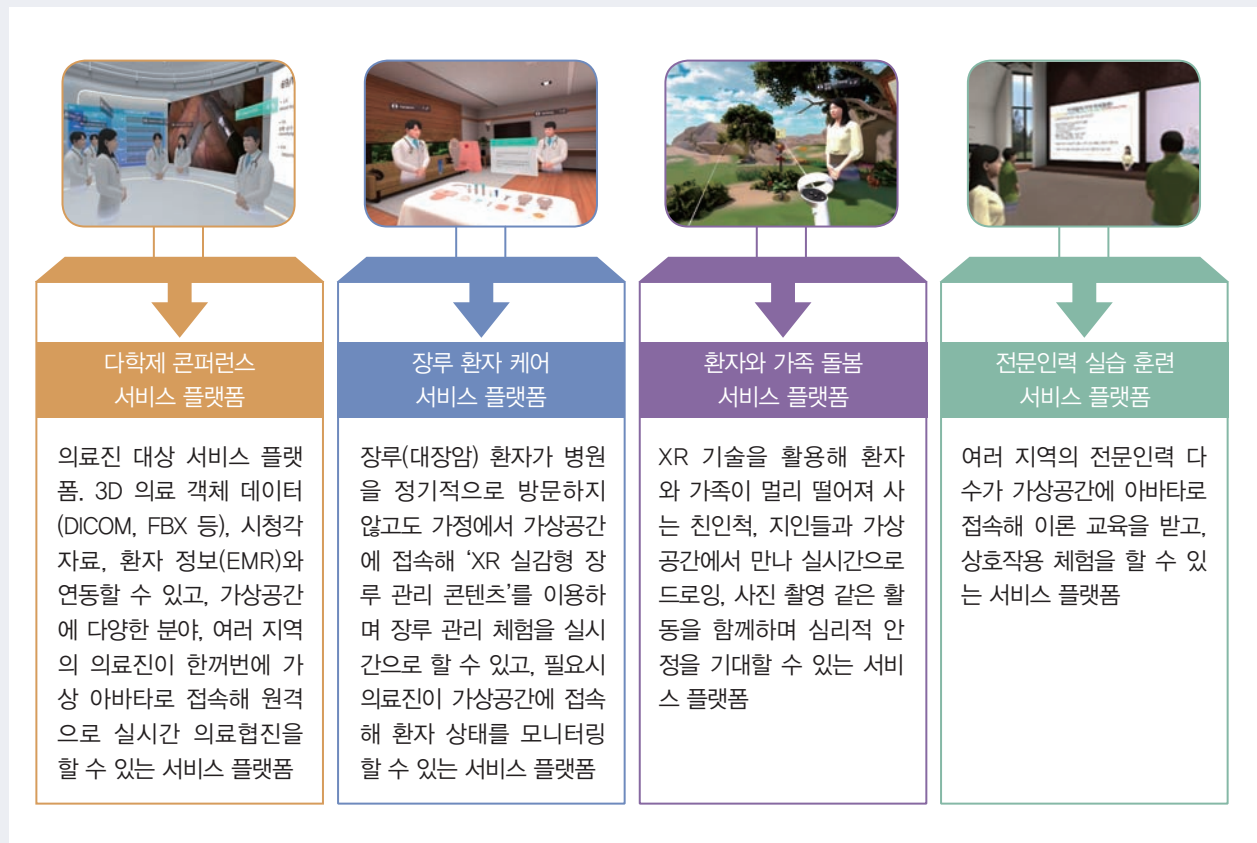
암케어 디지털 플랫폼은 가상공간에서 암 환자와 의료진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암센터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암 환자 돌봄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극복할 기반을 마련하며, 수도권 암 환자 쉼림 현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암 환자들이 쉽고 원활한 치료와 연속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했다

는 데 의의가 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비대면 암케어 디지털 통합 플랫폼 확산사업'과 연계해, 인프라 규모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서 각 지역암센터의 암케어 디지털 플랫폼 인프라 구축·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협업을 추진할 지역암센터는 경기지역암센터(아주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충남대학교병원), 울산지역암센터(울산대학교병원), 인천지역암센터(가천대길병원), 전북지역암센터(전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충북대학교병원) 등 총 6곳이다.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는 암케어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작업도 추진한다. 의료진용 장루 케어 플랫폼과 힐링 영상 체험 플랫폼을 개발하며, 신규 콘텐츠도 지속해서 개발하고 확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1 암케어 디지털 플랫폼 초기 모델



02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의 분기점, '한국관광 데이터랩' 탄생 이야기

관광빅데이터 공유와 시장분석 서비스



김영미
한국관광공사 관광빅데이터실장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 관광시대를 맞아 미래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하며 2019년부터 '관광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9년 컨설팅을 통해 3개년에 걸친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구축에 나서 2021년 2월, 한국관광 역사상 처음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의 움직임을 최신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는 관광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AI 관광분석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해 2022년 2월, 2차 서비스를 개시했다. 2022년 현재, 관광기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기반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 이용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최신 데이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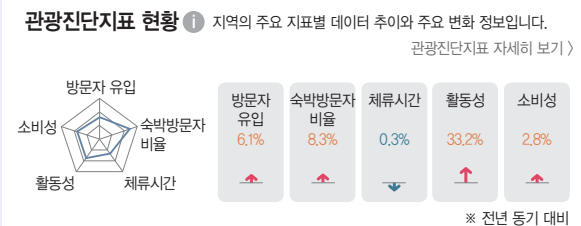
내외국인 관광객의 움직임 파악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통신, 카드, 내비게이션 등 민간 빅데이터를 비롯해 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관광 분야의 민간·공공 데이터를 일괄 확보해 개방할 뿐만 아니라 관광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관광 특화 융합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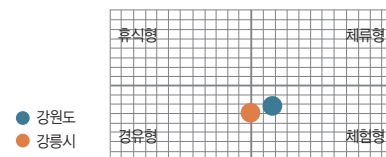
먼저 지역별 데이터랩의 경우, 기초지자체 단위로 내외국인 방문자 수와 이동·소비 행태, 고객 특성(성·연령·거주지·국적), 지역별 중심 관광지 등 지역관광시장 현황을 파

악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통신의 경우, 최근 4일 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종 데이터를 융합해 방문자 유입, 숙박방문자 비율 등 5가지 지표로 지역관광 소비자 동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광진단지표'와 관광목적지로

그림 1 강릉시 관광시장 분석 결과
(통신, 카드, 내비게이션 데이터 융합분석)



관광활동 유형



AI 관광 분석

- 방문자** 70세 이상 여성 방문자 수 증가율이 29.9%로 모든 성/연령 가운... >
- 관광활동 유형** 강릉시의 관광활동 유형은 경험형입니다. >
- 관광소비** 전년 동기 대비 문화서비스 소비 비율이 117.6%로 모든 업종 가... >
- 연관지역** 고객이동 기반 연계성 높은 지역: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평창군... >
- 유사지역** 관광진단 유사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

서 지역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관광활동 유형(휴식형/체류형/체험형/경유형)’은 관광마케터들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융합분석 서비스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기본 해석을 제공하는 AI 관광분석 서비스는 데이터를 어려워하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별로 조사통계, 통신, 카드 데이터와 공사 해외지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현지 동향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방한 외래객 수, 방한 여행형태, 코로나19 관련 입출국 정책 등 방한 관광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관광 분야 빅데이터와 스몰데이터를 융합분석해 관광 트렌드 전망, 코로나 시대 세대별 여행형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위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등 관광시장의 변화를 짚어주는 「이슈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발간하며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관광시장 트렌드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통찰을 전달하고 있다.

Feel에 Fact를 더하다! 관광업계의 똑똑한 파트너 ‘한국관광 데이터랩’

2022년 8월 말 기준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가입한 총 회원 수는 2만 788명이며, 기업·기관은 총 3,098개(민간 기업 2,283개)다. 특히 전국 지자체는 87%(광역지자체는 100%)가 가입해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활용하고 있다. 2021년 2월 오픈 이후 약 18개월간 누적 방문자 수는 약 30만명, 데이터 다운로드 건수는 23만건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실무자인 25~34세(31.4%)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그동안 활용 의향은 있지만 데이터 구입비 부담, 지속적 데이터 확보 채널 부재, 분석역량 부족 등으로 관광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무료로 최신의 관광데이터와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플랫폼 구축 전 진행한 고객수요조사에서 활용 의향이 92%에 달할 정도로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기다려 온 플랫폼이다. 특히 구축 후 2021년 말 고객만족도

는 4.54점을 기록하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서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활용사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기업, 기관, 지자체 등 실제 고객들의 데이터 기반 성과창출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광객에게 전동 키펠드 같은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 관광벤처기업 ‘이비이패스’는 자사 고객 데이터와 데이터랩의 데이터를 활용해 매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점을 예측하고 전동 키펠드를 배치하는 전략을 구사한 결과, 전동 키펠드 1대당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의 분기점이 되다!

공사는 미래 디지털 관광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게 됐다. 2021년 초 관광디지털본부를 신설하면서 디지털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에 더해 콘텐츠, 채널, 협업 얼라이언스 등 4개 중점과제를 선정 후 본격적으로 공사와 관광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2월 한국관광 데이터랩 오픈을 시작으로 2022년 3월에는 한국관광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관광 콘텐츠랩’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한국관광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내외국인 대상 여행정보를 제공하던 공사의 웹·앱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도 관광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사의 노력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한국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0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김대업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자율주행'이라는 혁명적인 새로운 기술이 일상 속으로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대한민국도 곧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 상황에 대응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특정 조건에서만 자율주행하는 레벨4 기술과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하는 레벨5 기술을 완전자율주행이라고 한다.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은 다양한 주행 상황에 대응하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대한 반복·재현 시험 등을 거쳐야 한다.

레벨4 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시험설비 구축 (K-City 2단계 고도화 사업)

그림 1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조감도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시험설비 구축을 완료해, 세계적인 자율주행 메카로 손꼽힌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총 215만㎡, 65만평) 안에 조성한 자율주행 실험도시(36만㎡, 11만평) 'K-City'는 기본적인 주행시험을 위한 도로를 구축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주행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보유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부터 3년간 'K-City 2단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레벨4 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시험설비를 구축했다. 기상환경 재현시설은 자율주행차가 강우, 안개 같은 기후환경에서 반복 시험과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총길이 620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갖춘 터널형 시험시설로 구축했다. 터널형 시험시설에서는 5mm/h에서 60mm/h까지 다양한 강우와 시정거리 30m 이상의 안개 상황을 각각 재현할 수 있다.

통신 음영 재현시설은 도로상 최악의 전파환경을 모사해 GPS, V2X(차량·사물 통신) 등에서 전파 차단, 교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평가·검증할 수 있는 시설로, 도심 빌딩 숲, 터널 등 통신이 어려운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혼잡주행 재현시설의 로봇시스템은 보행자, 자전거, 주변 차량 등의 교통객체를 실제와 가깝게 묘사해, 혼잡한 교통환경

그림 2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내 기상환경 재현시설



그림 3 통신 음영 재현시설



을 재현한다. 충돌 시 파손을 방지하는 형태여서 자율주행차 평가를 할 때 반복·재현 시나리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로봇시스템은 자동 또는 수동제어로 실차(실물 차량)를 평가하는 시스템과 보행자(어린이, 어른, 자전거 이용자)와 자율주행차가 충돌하는 대항차(상대 차량) 구현이 가능한 보행자(충돌 타깃) 이송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 위한 민간 지원 추진

위와 같은 K-City와 K-City 내 여러 시설을 보유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완전자율주행 승용자동차(Lv4) 상용화 정책'에 발맞춰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전용시험장과 교통 인프라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국내 대학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자율주행 연구기관이 2027년까지 K-City를 상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그뿐만 아니라 K-City 내에서 기업들이 중장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창업 공간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 시설인 혁신성장 지원센터를 2022년 6월 준공했다. 혁신성장 지원센터는 보안정비고, 사무실, 회의실, 전기충전시설 등을 갖춘 2층 건물로, 2022년 하반기에 민간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K-City의 시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www.kat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K-City가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차 평가환경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4 혼잡주행 재현시설(로봇시스템)



04

한국중부발전(주)

풍력발전 연계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드론 충전소 구축



나재범
한국중부발전(주) 수소사업실 차장

사업 취지와 목적

한국중부발전(주)은 풍력발전의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P2G(Power To Gas) 설비를 실증¹⁾하고, 생산한 그린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수소드론 충전소를 제주 상명풍력단지에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확대에 따라 잉여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했다.

설비 개요와 구성

상명 P2G 설비는 500kW급 설비용량으로, 250kW 수전해(水電解) 설비와 250kW 배터리 용량을 가진다.²⁾ 수전해 방식은 알카라인 수전해로, 수전해 효율은 약 62%이며 시간당 4.7kg의 수소를 생산해 200bar의 압력으로 저장한다. 2017년 한국에너지평가연구원의 정부 연구과제로 추진되어 86억 5천만원의 비용을 투입한 가운데 2021년 7월에 과제를 실증했다.

추진경과

한국중부발전(주)은 통합운영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생산 실증을 완료했으며, 상명 P2G 설비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했다. 2021년 4월에는 1천시간 이

상 그린수소 생산 능력과 생산된 수소의 품질을 확인했으며, 2021년 7월에는 풍력 잉여전력 활용을 위한 500kW급 수전해 시스템을 실증했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제주 상명풍력단지 수소드론 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배터리 드론 대비 체공시간과 수송 능력이 우수한 수소드론은 인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점검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공사 현장의 고소작업에 투입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해 생산한 그린수소를 다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생산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선순환 모델을 제시한다.

상명 P2G 보강계획

향후 단계적으로 상명 P2G 수전해 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린수소 일일 생산량을 증대하고 안전설비를 강화해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를 상용화하고, 제주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1단계로 수전해 설비의 상용화를 위해 설비 정비를 추진하며, 2단계로 압축기 설비를 증설해 그린수소 일일 생산량을 기존 36kg에서 100kg까지 늘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수전해 시스템 한 세트를 추가 설치해 그린수소 일일 생산량을 200kg까지 증대할 예정이다.

1) 설비 등에 대한 실증은 개발한 설비를 본격적으로 운전하기 전에 성능평가 등을 거쳐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임

2) 수전해 설비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생성하는 설비임

기대효과

상명 P2G 설비는 제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는 미 활용 전력을 활용해 출력변동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송전계통의 간헐성 해소, 전력계통의 그리드 주파수 조정과 속속성 향상을 통해 계통 안정도를 증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소 생산 및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뉴딜 사업을 통해 수소 충전원과 설비 안전관리자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확장방안

1. 수소드론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드론 활용처 확대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립된 도서지역 대상 의료장비나 택배 수송 등 수요처를 확대할 계획이며, 가스 배관이나 설비 위험시설 점검처럼 수소드론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업해 해변 안전과 농작물 피해 감시용으로 수소드론을 적극 활용하면서 수소 가치사슬(Value Chain)도 구축할 계획이다.

2. 그린수소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이와 함께 전문적으로 그린수소시스템을 운영하고 정비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장도 마련해 그린수소 메카로서 전시 기능을 강화한 견학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3. 수소충전소

제주특별자치도는 CF(Carbon Free Island)를 구축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상용차를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수소승용차,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그린수소 생산량을 증대해 제주특별자치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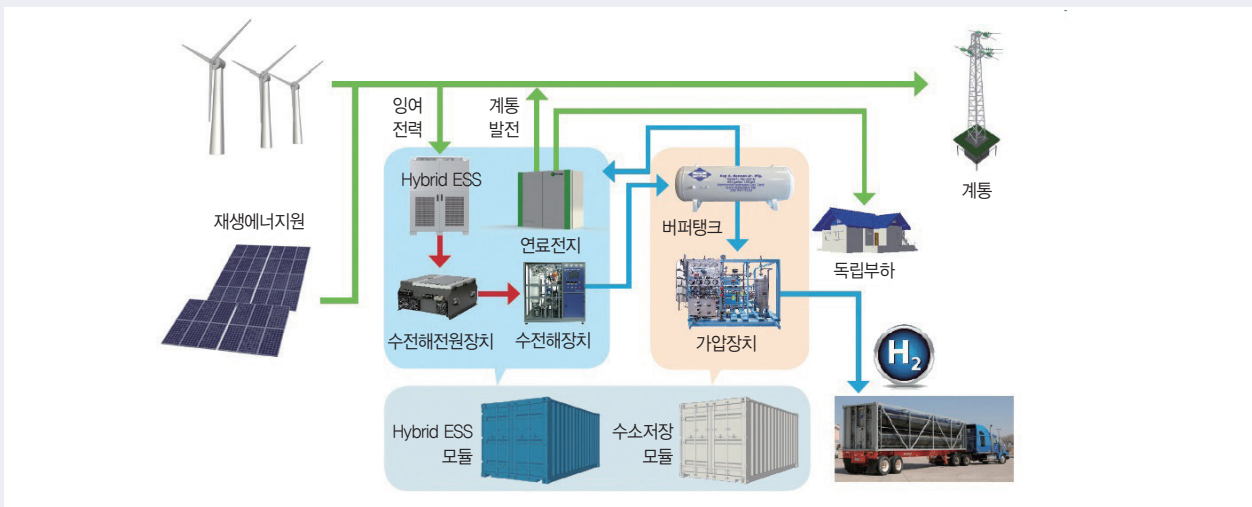
4. 발전기 냉각용 수소

전국의 석탄발전기, 가스발전기 등은 발전기 냉각용으로 연간 약 5만kg의 그레이수소를 사용한다. 이를 그린수소로 대체한다면 냉각효율을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5. 일상생활의 그린수소 테스트베드 구축

상명 P2G 설비 인근 지역에 수소 배관을 설치해 그린수소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린수소 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린수소를 연료로 보일러를 돌려 난방을 하고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기로 불을 켜고 생활가전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제주 상명풍력단지 P2G 구성도





공공기관 TALK

〈공공기관 TALK〉는 공공기관 현직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관장의 경영철학과 기관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는 ‘CEO인터뷰’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말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혁신도시 박람회’에서는 2014년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직원들의 미니인터뷰를 통해 근무·생활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잡(JOB)담’에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소개하고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담당자를 만나본다. 마지막으로 ‘나의 취업성공기’에서는 ‘2021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고졸채용 부문’ 당선작 중 한국조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이 독자분들에게 흥미롭게 전달되길 기대한다.

CEO인터뷰

시청자미디어재단 / 창업진흥원

혁신도시 박람회

한국콘텐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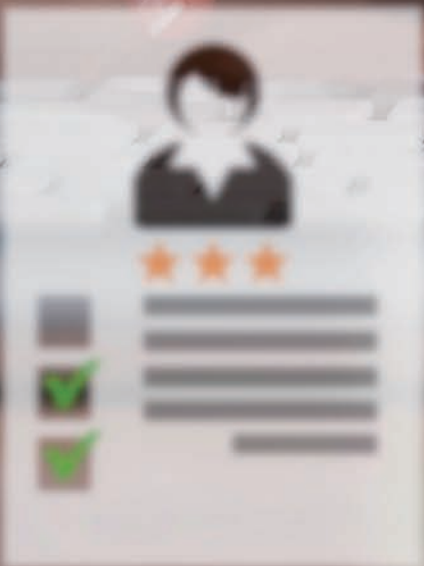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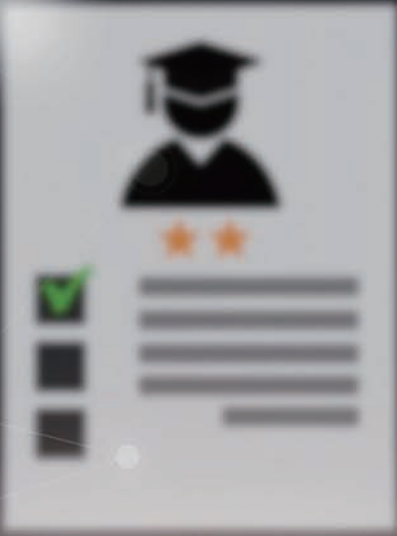
잡(JOB)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축산물품질평가원

나의 취업성공기

한국조폐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과 따뜻한 동행으로 미디어와 함께하는 삶에 행복을 더합니다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학력

경남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희대 영어영문학 학사

주요 경력

2021~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2015 세계일보 사장
2013 MBN 해설위원
20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2008 방송위원회 전문위원
2005 세계일보 정치부장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조한규입니다. 『공공경제』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 2에 따라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재단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 10개 광역권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광주·강원·대전·인천센터 등 5개 센터가 먼저 개관됐고, 재단은 2014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설립됐습니다. 이후 서울·울산·경기·충북·세종센터를 순차 개관해 현재 10개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국민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사업과 콘텐츠 창작·활용지원을 통한 미디어참여 활성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영상, 라디오, 1인 미디어 스튜디오에서는 미디어 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나 장비 사용법, 촬영·편집·제작은 물론 비평·이해, 강사 양성까지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미디어체험·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최신 장비를 빌려 제작 활동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접근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방송광고로부터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 개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CEO를 역임하고 지난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소회가 어떠신가요?

오랜 기간 신문기자, 방송사 해설위원 등 민간 미디어 분야에서 일한 경험과 언론사 사장으로서의 경영활동, 옛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력들이 지금 재단의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소통’의 중요성과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디지털 미디어 소통의 중심기관으로서, 이용자인 국민들과 더불어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또한 전국 조직을 두고 있는 특성상 내부 구성원 간의 소통활동도 병행했습니다. 가령 격월로 진행되는 ‘화창한 토크’라는 행사를 신설해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단이 경영평가를 받게 된 지 6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B등급을 받는 성과도 이뤄졌습니다.

미디어 접근·활용능력이 소통의 필수 요소이지만,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자

2022년 9월 21일(수)

장소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
(서울 여의도)

대담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



전 국민 맞춤형 교육,
디지털 미디어 접근 취약
대상 찾아가는 교육,
역기능 예방 및 신기술
교육 확대 필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 환경 변화에 맞춘 주력 사업들은 무엇인가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일상생활이 디지털 미디어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상공간에서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고, 인공지능의 추천을 받아 실감형 콘텐츠를 즐기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기술 혁신과 ICT산업 발전은 더 편리한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인 동시에,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며 여러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건강한 미디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필수역량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측면에 방점을 두고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추진하려 합니다. 첫째, 전국 10개 센터를 통해 국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쉽게 접근·활용하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야기한 비대면 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해온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미디온’의 모바일 앱 서비스도 개시했습니다. 둘째, 장애인이나 노인, 다문화 이주민, 학교 밖 청소년 등 디지털 미디어 접근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이 꼭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센터가 없는 원거리 지역민과 도서산간 주민을 대상으로, 방송스튜디오 시설과 장비를 탑재한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해 온 차량 2대에 추가로 올해 6대를 신규 구축해서, 총 8대의 ‘미디어 나눔버스’가 전국 곳곳에 계신 국민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AI·빅데이터·메타버스 등 신기술 중심 미디어 분야로 교육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미디어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이나 중독, 허위정보, 알고리즘 편향 등 각종 역기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이용 시작 연령은 점차 빨라지고,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량 또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연령별로 활용하고자 하는 범위와 목적이 다르고, 교육 수준의 격차도 크기 때문에 연령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디어기기 활용교육

부터 자신의 생각을 콘텐츠에 담은 미디어 제작 교육, 올바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미디어 이해 교육까지 전 생애단계에 걸쳐 익힐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등 보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로는, 앞서 말씀드린 ‘미디어 나눔버스’ 확충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센터 추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운영 중인 10개 센터 외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전북 등 신규 5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충남 등 미건립 지역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추가 건립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민 미디어 참여 활동이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의 방송참여’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재단은 시청자가 방송의 수용자를 넘어 방송의 주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도록 올해 72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채택료 지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발굴해서 지역민과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동으로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이웃과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나 지역정보 등이 방송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시민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미 시청자는 방송의 수용자에서 미디어 이용자와 콘텐츠 생산자로 개념과 역할이 확장됐습니다. 시민의 미디어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찾고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디어 콘텐츠로 소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송프로그램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고지와 캠페인 영상을 통해 재단 사업을 많이 알고 있는데,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강화에 대해서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재단은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돕는 장애인방송 서비스인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의 제작비를 방송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물론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를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소외지역 없도록 센터 전국화 추진 중,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강화가 미디어 포용이며 미디어 공정의 핵심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
‘미디어 리터러시 조족등
(照足燈)’의 역할 수행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확대,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 도입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도 다각도로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이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화면 분리·확대, 자막위치 조정, 음성인식 리모컨 등 특화기능을 탑재한 맞춤형 TV를 매년 1만 5천대가량 보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을 위해 개발된 AI 기반 자동 음성-자막·수어 변환 ‘이어줌’ 앱을 시범서비스 중이며, IPTV 3사 셋톱박스에 자막 크기와 위치조정, 채널정보 음성안내 개발을 지원하는 등 이용 편의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소외되던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인터넷상에 산재한 쉬운 콘텐츠들을 선별 제공하는 발달장애 콘텐츠 전문 사이트 ‘다모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국정운영원칙 ‘국익·실용·공정·상식’ 중 ‘공정’은 ‘포용’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경(道德經)』 16장에 “知常容 容乃公(지상용 용내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늘 그러한 이치를 알면 포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면 공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강화’는 바로 미디어 포용이며 미디어 공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맞춰 재단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단도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혁신계획’을 제출했고, 이에 따른 전략체계 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유사업과 경영 전반 혁신은 물론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 혁신경영’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임 초부터 ‘CEO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새정부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조족등(照足燈)을 밝히자’라는 칼럼을 이 자리에서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족등은 조선시대에 어두운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불빛이 발밑을 비추도록 만든 등(燈)입니다. 그럼 요즘 세상에도 조족등이 필요할까요? 물론 조선시대와 같은 조족등은 필요 없겠지만,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현대적 의미의 조족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조족등’의 필요성을 직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재단 본부와 센터를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역점을 뒀야 할 부분은 바로 이웃의 마음, 국민의 마음, 이용자의 마음, 시청자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조족등’의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재단은 분명 그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미디어 세상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국민의 미디어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0개 광역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

미디어스튜디오에서
영상·라디오 등의
미디어 제작 체험



교육

촬영·편집·비평·이해
연령별, 매체별 수준별
다양한 교육 제공



참여

시설·장비 대여 및
플랫폼 편성·방영 등
창작활동 환경 조성



네트워크

시민참여행사 개최,
기관·단체 협력으로
지역 상생발전 지원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미디어교육 ON
<http://edu.kcmf.or.kr>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센터	주소	연락처	센터	주소	연락처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2	051)749-9500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7길 20	02)6949-2380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062)650-0300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10길 78	052)960-7000
강원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033)240-2345	경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46	031)560-7200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042)865-3700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043)290-9200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54번길 19	032)722-79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	044)860-8600



세계 일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창업진흥원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용문 창업진흥원 원장



학력

부산대 경제학 박사
부산대 경제학 석사
부산대 경제학 학사

주요 경력

2021~현재 창업진흥원 원장
2019~202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교육원 부원장
2009~2021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03~200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

지난해 5월부터 창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신데요. 인사 말씀과 함께 창업진흥원에 대한 간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공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원장 김용문입니다.

창업진흥원은 국내 유일의 창업지원 전담기관으로, 국민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을 촉진하며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기술·서비스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창업진흥원은 창업을 위한 자금, 인력, 판로, 입지 등 직접적인 창업자 지원과 기업가정신 제고, 창업문화 조성, 지원시설 운영 등 창업 인프라 조성을 통해 국내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제5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코로나19 확산, 디지털 전환, 제2 벤처 붐, 그리고 최근 투자시장 위축까지 창업생태계에 수많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해 왔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K-스타트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포착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업의 최전선에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취임 후 1년여간 창업진흥원을 이끄시면서 소기의 성과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여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장 먼저, 비대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창업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에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책 수요자들이 사업 신청부터 사업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또한 창업 단계별 강좌와 최신 트렌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창업에듀’, 창업자 대상 전문가 멘토링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멘토링 플랫폼’ 역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하는 민간 중심의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관춘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정부 주도의 중국과 다른, 대한민국만의 조화로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협력 창업생태계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창업진흥원이 민간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



기관 사정으로 인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민(民)과 관(官)이
협력하여 창업으로
혁신하는 한국의
독자적 생태계,
‘민관협력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해야



기 위한 것으로, 스타트업 중심의 민관협력 체계를 정립해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취임 초기, 창업진흥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기관 상징인 CI를 변경하고, ‘비전 2030’ 발표를 시작으로 더 나은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부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의 점점에 계신 만큼, 많은 스타트업을 만나실 것 같은데요. 현장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우문현답(愚問賢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답변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장에 취임하며, ‘우리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자문(自問)했습니다. 창업지원의 점점인 현장에서 그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듣게 될 다양한 질문에 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관 운영 방향 중 하나로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경영’을 발표하고, ‘1주(週)1사(社) 방문’을 원칙으로 취임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창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스타트업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국내 창업생태계는 ‘제2 벤처 붐’의 도래와 함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국내 창업기업 수는 2017년 125.6만개에서 2021년 141.8만개로 13% 가량 증가했을 뿐 아니라, 기술기반 창업은 최근 5년간 20.6%(2017년 19.9만개 → 2021년 24.0만개) 증가하며 제2 벤처 붐의 확산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벤처투자 실적은 종전 역대 최대실적인 2020년 4조 3,045억원보다 무려 약 3.4조원 늘어난 7조 6,802억원으로, 전년 대비 78.4%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적 위상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유니콘기업은 2016년 2개에서 2021년 11개로 급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스타트업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가 공개한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2021/2022 Global Report)』에 따

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NECI)는 2021년 기준 5.7점으로 참여국 50개 중 6위를 기록해, 2020년 9위(5.49점)에서 3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는 90.49점으로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하며 혁신역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의 창업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창업을 통해 혁신을 발현시키는 우리만의 창업생태계를 공고히 해야 할 시기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관련 이슈로 ‘흑한기’라고 일컬을 만큼 투자시장이 위축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투자시장으로 이어져, 국내외를 막론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CB Insights)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전 분기(2021년 4분기 1,779억달러) 대비 약 19% 급감한 1,439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의 2022년 1분기 벤처투자 규모 역시 2021년 4분기(2조 4,209억원)에 비해 약 14% 감소한 2조 82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시장이 위축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런치베이스(Crunchbase)의 글로벌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분기를 기준으로 초기 단계와 후기, 기술성장 단계의 투자는 감소한 반면, 시드투자 금액은 91억달러로 전년 동기(83억 달러) 대비 약 9.6%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투자시장은 극초기 스타트업에는 ‘성장가능성’을, 그 이후 단계에는 ‘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육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보다는 ‘생존’에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새로운 기회에 투자하며 수익을 늘려, 런웨이(runway, 생존기간)를 연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민관협력의 확대’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TIPS(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민간 투자자가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TIPS는, 최근 ‘시드 TIPS’를 신설해 초기 스타트업



투자 위기 극복을 위해 생존에 집중하고 새로운 기회에 투자해 생존기간을 연장해나가야





‘투자위축’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축이 아님’을 깨닫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



의 창업 준비부터 시드투자 유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및 국내 대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며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민관협력을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패를 밑거름 삼아 다시금 새로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재창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민관이 협력해 스타트업 재기를 돕는 ‘Re-Bor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신한은행과 협력해 조성한, 재창업기업을 위한 공간 ‘리본 스페이스’를 시작으로 대상(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재기지원 활동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붕괴 및 재편에 대비한 ‘제조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 창업생태계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조창업은 시장 진입장벽이 높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ICT 중심의 플랫폼산업이 위축되는 시점에 제조창업 활성화는 재편되는 투자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개방성을 독려하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하고, 민간 역량 활용 및 부처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 해외 인재·자본의 국내 유입환경 조성 등 세부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22일 양일간 미국 현지에서 ‘한-미 스타트업 그랜드 서밋’을 개최하며, K-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타트업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제2 벤처 붐’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듯, 투자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업진흥원도 혁신적 사고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타트업을 위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일생에 한 번은 창업을 경험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기술이 발전하며,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갖기 위해 창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창업진흥원은 여러분의 창업이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창업의 미래를 여는 혁신창업 파트너’로서, 여러분의 곁에서 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My Job
Tomorrow

내일을 위한 든든한 동행^{스타}

생각만으로는 어려운 “창업의 꿈”

그 꿈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곁에
“혁신 창업 파트너” 창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창업자들의 새로운 내일을 위한 힘찬 도전!
창업진흥원이 함께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광주·전남 혁신도시, 첨단기술과 문화 콘텐츠로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을 전하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람들을 만나다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정보통신이 융합된 디지털·유비쿼터스 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형 거점도시를 꿈꾸는 계획도시다. 장기적으로는 녹색전력(스마트그리드), 국가 에너지산업, 정보통신, 문화예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서남 경제권을 아우르는 문화수도를 건설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성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14년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기관 이전을 마친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람들을 만나본다.

광역경제권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의 미래

중앙·지방 간 기본협약에 따라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전력, 정보통신, 농업,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에너지산업 광역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국가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전력기술 첨단화를 위한 기업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농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강화했으며, 문화예술산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는 계획도 추진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 교육·과학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산·학·연·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나주시는 '에너지산업 선도 미래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전남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내에 기업, 연구소 집적을 통한 국내외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창업기회 확대를 위한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유망 K-콘텐츠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민간 투자기관 6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콘텐츠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힘쓰고 있다.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 문화예술산업 등 4개 기능군의 공공기관을 유치한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전략산업 간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로 성장하고자 한다.

혁신도시 내에 에너지산업 광역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전력기술 첨단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주), 한전KDN(주), 한국전력거래소 등 4개 기관이 이전했다.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광역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지역전략산업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이전했다. 또한, 문화예술산업과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Mini Interview

한류, 바다 건너 해외로 KOCCA, 나주에서 전국으로

이종훈 한국콘텐츠진흥원 소통홍보팀 차장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류가 시작되는 곳, 모든 K-콘텐츠의 토대가 되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소통홍보팀에서 근무하는 이종훈 차장입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사회생활을 20년 넘게 하니 MBTI가 ENFP(재기발랄한 활동가)에서 INFP(열정적 중재자)로 바뀌면서 저의 활동은 줄이게 되나 봅니다. 손을 바라보는 나이에 머뭇거림을 뒤로하고 재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 꽃중년, 파이팅!!!

기관 이전 전과 후의 생활환경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직장과 거주지를 옮겨야 했기에 퇴사까지 고민했습니다. 일단 가보자란 생각에 왔고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퇴근 후에도 회사 선후배와 대화의 기회가 많아졌고, 골프, 헬스, 걷기 등 취미가 다양해졌습니다. 각자 소화행을 이뤄가며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말부부를 하고 있어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애뜻합니다. 이제 제2의 고향처럼 나주가 정말 편해졌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의 근무환경은 어떠한가요?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어 기관 경쟁력 하락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K-POP, K-드라마, 게임, 웹툰, 영화 등 한류 콘텐츠에 환호하는 바다 건너 해외 팬들에게 다가가듯, 우리 기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창작자에게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온라인 회의, 다양한 SNS 플랫폼 소통, 효율적인 출장업무와 부서 간 협업, 지자체 및 협력단체 연계사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기업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향후 당신의 미래 계획은?

중소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이 한류 콘텐츠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저희도 한류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정년 이후 아니 그전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민간에서 문화 공익활동을 하며 노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Mini Interview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즐겁다

이하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소통홍보팀 과장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소통홍보팀 이하영 과장입니다. 저는 진흥원에 입사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대중문화예술인 지원,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거쳐 지금은 언론홍보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도, 드라마, 웹툰을 보는 것도, 게임하는 것도 다 업무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와서 매우 설레었는데, 지금도 콘텐츠로 둘러싸인 업무환경이 제게는 최고의 복지인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생활의 장단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 1~2km 반경 내에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집과 회사 건물도 가깝고, 운동하는 곳들도 도보거리로 다닐 수 있죠. 바람 싹고 맛집에 갔다 올 때도 시간적인 부담이 없으니 혁신도시 안에서는 마치 대학 시절 캠퍼스 생활하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물론 처음에는 공과 사가 잘 분리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극복한 것 같아요.

지방 이전 전과 후의 근무 경험을 비교한다면?

입사 3년 차에 지방 이전을 해서 이전 전과 후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전 전에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언제든지 업계 분들이 찾아오셔서 업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저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나주 이전 이후로는 업계 고객과의 만남을 미리 계획해서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장단점은 있지만 근무환경이 변할 때마다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됐네요.

혁신도시에서 당신의 미래는?

부모님을 떠나 혁신도시에서 처음 독립한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즐기고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요. 지금도 특별히 시간을 많이 내지 않아도 목포, 여수 등 나주 주변으로 여행도 다니고, 숨겨진남도 맛집도 발굴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회사생활과 함께 제가 있는 지역의 아름다움과 맛을 충분히 즐기는 직원이자 나주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K-콘텐츠 성장을 위한 모든 것,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한다

K-콘텐츠 전성시대다. 지난 2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K-콘텐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다. BTS는 수준 높은 음악성과 퍼포먼스, 그리고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쳤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글로벌 OTT에 힘입어 전 세계 1억 4천만가가 시청했고, 83개국에서 시청순위 1위를 차지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도 2021년 165개국에서 인기 게임 1위에 올랐으며, <로스트아크>도 최근 글로벌 이용자 수 2천만명을 돌파하며 유럽, 북미 등 서구권에서 흥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웹툰 또한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며 그 위세를 넓혀가고 있다. 2019년 영화 <기생충>에 이어 올해 칸영화제에서도 배우와 감독의 수상 소식이 전해졌고, 애니메이션계의 칸영화제라 불리는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도 우리 애니메이션 <태일이>와 <각질>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지 못할 만큼 다양하다.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성공은 연관 산업에까지 파급력을 미친다. 올해 5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K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수출액이 1억달러 증가할 때, 연관 소비재 수출액은 1.8억달러 증가한다. 이와 함께 5.1억달러의 생산유발효과도 발생한다. 세계인은 K-콘텐츠를 경험하며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소비한다. 또한 2021년 해외문화홍보원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인은 K-컬처라고 불리는 한국의 현대문화와 BTS 등 한류 스타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곧 관광산업으로 연결된다. K-콘텐츠는 이미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브랜드 위상을 드높이는 핵심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스토리, 애니메이션, 음악, 패션, 실감콘텐츠, 지역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성공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산



콘텐츠도서관 북페어 - 콘텐츠 창작자 토크 콘서트를 통한 지역 청소년 진로체험(사진제공: 필자)



게임문화 가족캠프 - 가정 내 건전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캠프형 프로그램(사진제공: 필자)



콘텐츠 나눔행사 - 지역 아동 대상 KOCCA 지원사업 애니메이션 상영회(사진제공: 필자)

업 성장과 한류 확대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올해는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기획, 투자, 제작, 유통 등 콘텐츠 비즈니스의 전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콘텐츠 스타트업 및 인력양성,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콘텐츠 특화 지역공헌, 협력으로 지속가능 사회 조성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년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협업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자원 재분배를 통한 지역상생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가 가지는 힘을 통해 지역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가정 내 건전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게임문화 가족캠프, 지역 청소년들에게 콘텐츠 창작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도서관 북페어 등 콘텐츠 장르 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민과 마주하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관련 공헌활동도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환경의

날을 맞아 '가치, 그린 캠페인' 주간을 통해 전 직원 차량 없는 날, ESG 환경서가 구성, 온실가스 감축 교육, 지역 친환경제품 반짝 매장 등을 진행했다. 더불어 기관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비료화하는 활동에도 참여하며 전 직원이 친환경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이러한 지역사회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최근 2년 연속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가치, 그린 캠페인 - 지역 친환경제품 반짝매장 운영(사진제공: 필자)



지역 청소년 대상 생리대 꾸러미 기부(사진제공: 필자)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 꽃 심기와 환경 개선(사진제공: 필자)

기관 인프라 활용,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노력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연계하고, 제 공하며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 문제해결플랫폼과 협업 중이다. 2019년부터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RE100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상호문화이해교실 운영 등 현재까지 16개의 지역문제 의제에 참여해 환경, 소수자 포용 등의 지역문제를 해결해 왔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문제 해결을 주도한다.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사회공헌 수요를 매칭하는 의제인 '가치 공유의 장'이 전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의제로 선정되어 전남에 있는 7개 공공기관이 협업하고 있다. 협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에는 전남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생리대 꾸러미 300여개를 기부하기도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도 시민사회 영역과의 간담회 등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의제를 발굴하고 수행할 예정이다.○

Mini Interview

K-콘텐츠와 함께하는 저녁 있는 삶

김효진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지원단 주임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지원단 김효진 주임입니다. 2019년에 입사하여 홍보팀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는 해외사업지원단에서 K-콘텐츠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류 마케팅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타공인 '콘텐츠 덕후'로서 입사 후, 콘텐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퇴근 후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와 거주지가 가깝다는 점입니다. 저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퇴근 후엔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동기들도 혁신도시 안에 살고 있어 독서모임을 하거나, 보드게임,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시청을 함께하며 콘텐츠가 있는 저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사와는 정말 일하기 좋다! 이런 상사와는 정말 일하기 힘들다!

일할 때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 되는 상사와 일할 때 즐겁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콘텐츠와 문화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대다수이고 저보다 젊은 감각을 지닌 상사분들이 많아 입사 초반에는 깜짝 놀랐는데요. 어제 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어땠는지, 최근 어떤 게임을 하는지 이야기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당신의 미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회사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동기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며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에서 콘텐츠와 함께하는 일과 제 삶 모두 행복하게 챙길 계획입니다.

내 숨은 자산 한눈에???

통장에서 잠자는 숨은 자산 찾기



손쉽게 숨은 자산을 찾는 방법!

※ 가까운 상호금융 영업점에 문의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유연
예적금

미지급
출자금
배당금



파인 홈페이지
(fine.fss.or.kr)접속

내 계좌
한눈에 클릭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계좌조회 및
미사용 계좌 해지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 설치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이용등록

계좌조회

미사용 계좌 해지



채용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1967년 12월 농공(農工)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해 '농어촌개발공사'로 발족했습니다. 우리 공사는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학교, 나이, 성별 등 지원자 개인의 인적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를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가점 등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알려주세요.

자기소개 문항을 진솔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함을 바탕으로 각 문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해당 평가요소와 관련된 본인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



육심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인재지원부 과장



습니다. 더불어,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관련된 교육, 자격, 경력, 경험사항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본인의 경험, 역량 등이 공사의 인재상과 어느 부분에서 부합하고 공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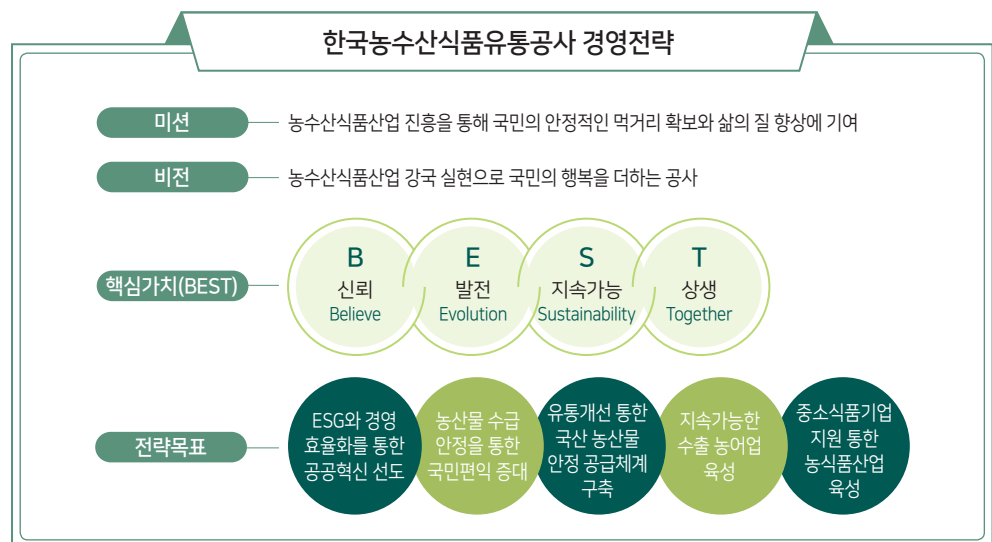
필기 및 면접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전형의 경우 직업성격검사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분야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이뤄지며 채용 분야에 따라 상식, 전공, 논술 등 직무능력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조직이 해, 자원관리,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4개 영역을 평가하며 정보해석, 시간관리 등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직무능력평가의 경우 공개된 시험과목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에서는 직무역량과 함께 인성, 인재상 등 여러 요소를 평가합니다. 입사지원서를 기반으로 질의 응답이 이뤄지기 때문에 질문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미리 답변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공사가 하는 여러 사업 중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한 본인만의 이유와 강점, 비전 등을 정리해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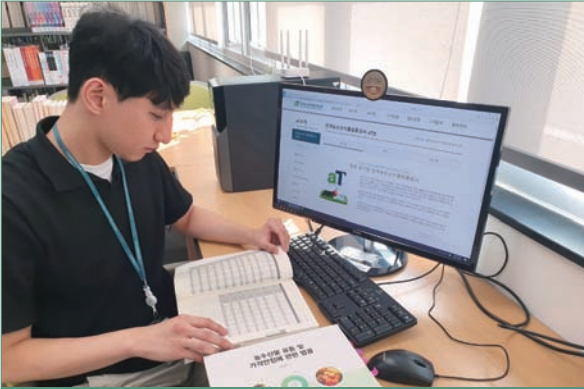
사업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형 청년인턴 등을 통해 사업 및 조직문화 등을 경험해보는 것도 공사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사의 역할, 사업 분야,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 등을 공사 홈페이지,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여기에 본인의 경험과 경력 또는 교육사항 등 입사를 위해 직무역량을 개발한 내용을 접목해보는 고민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자
인터뷰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자신감 잃지 않기



이병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시장지원부 주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시장지원부 이병훈 주임입니다. 2020년 말에 입사했고, 현재 부서에서 약 1년 8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발간 및 실태조사, 도매시장 온라인거래 지원사업, 도매시장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의 공영도매시장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매사 자격증 발급·관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약칭 「농안법」) 자문관 운영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유통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픈 마음이 컸고, 농수산물의 수급·유통, 그리고 수출과 식품산업 진흥 업무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aT에서 근무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편의점업계에서 1년 1개월간 근무했던 경험과 공공기관에서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분야는 다르지만 유통업계에서 영업관리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aT의 유통개선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이를 통해 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서 인턴 활동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사업구조와 조직 분위기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본인 직무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말해주세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 국정과제에 도매시장 거래정보의 디지털화 관련 내용이 담겨있듯이, 제가 담당하는 통계연보 발간 업무도 DB 구축 작업 등의 데이터 전산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도매유통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도매시장 경매 데이터가 1일 평균 12만건에 육박하는 만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데이터 수집·관리 능력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담당 업무에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수집하고 관리하는 도매시장 관련 데이터가 농산물 도매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반면, 도매 시장에서 이뤄지는 경매 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농안법」 관련 법률 지식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숙지해야 할 정보가 많다는 점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직접 작업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책자를 처음 발간했을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작업한 자료를 드디어 책자로 발간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 수와 다운로드 수가 늘어남을 지켜보면서 흐뭇했던 기억이 납니다.

입사 이후 회사생활과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이전에 편의점업계, 즉 사기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의 업무 분위기는 사기업보다 정적이고 경직될 것 이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근무해 보니 많은 직원이 담당 사업에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면서 자기계발을 위해 퇴근 후에도 부단히 힘을 쏟고 있어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제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다면 면접전형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해당 시점의 기관 현안과 이에

대한 해결책 등에 대한 논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회의록 내용을 숙지하고 면접전형에서 이를 잘 드러낼 수 있다면, 평가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퇴사하고 원하던 기업에 입사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힘든 취업준비 시기에 '취업하기 힘든, 비록 얼어붙은 시기임에도 여러분들은 그 얼음을 깨고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꽃 한 송이라고 확신합니다.'라는 말이 도움이 됐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자신감을 잃지 말고,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점 또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용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축산물품질평가 사업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축산물(소·돼지·닭·오리·계란)의 등급판정제도 운영과 품질평가 품목 확대(말·벌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생산된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컨설팅, SI, 영상기기 등을 활용한 품질평가기기 개발 등 품질평가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축산물이력제 사업은 축산물의 신속한 이력추적으로 가축 방역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이력정보를 통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스템과 앱 개발, 정보 정확도 관리를 위한 DNA 동일성 검사 및 가축출하물량 관측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축산물유통정보 사업은 유통단계의 가격·비용·경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물 수급과 가격산정 등 축산유통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만들고, 유통단계별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경매, 축산물가격비교서비스 등 유통사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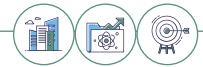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공공기관처럼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서류-필기-면접전형으로 나뉘며, 서류전형의 경우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평가로, 필기전형은 인성검사, NCS, 직무시험(전공)으로, 면



서지희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재개발처 과장





접전형은 상황·경험면접과 전공면접(PT·발표)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참고로 필기시험에서 직무능력검증(전공필기시험)을 보는 경우, 면접에서는 전공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알려주세요.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점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자기소개서 문항 앞에 해당 항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NCS 능력사항(예: [자기개발능력] 최근 5년간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을 적어 놓았습니다. 기관이 요구하는 역량과 본인의 경험을 지원한 직무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필기 및 면접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필기 또는 면접전형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합니다. 필기는 전공시험, 면접은 발표면접 또는 PT면접으로 직무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중 인성, NCS는 시중에 출시된 서적을 참고하면 무난히 통과 가능한 수준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응시자들은 직무시험(전공)의 경우 관련 기사시험(예: 축산기사) 관련 서적과 객관식 경영학 서적, 공무원 시험 기출문항 등으로 준비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기관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신의 역량의 연관성을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용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용전형 응시는 자신의 역량수준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에 도전하기 전, 살면서 경험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정리해보는 과정을 추천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본인의 역량과 기관이 요구하는 역량의 연결고리를 실전에서 적극적으로 강조해보시길 바랍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재상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자신의 꿈과 조직의 비전 달성 그리고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KNOWLEDGE

최고 지향 전문가

기본에 충실하고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ACTION

실천하는 행동가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와 준비된 계획을 적극 실천하는 인재



PARTNERSHIP

열린마음 소통가

상대방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는 인재



ENERGETIC

도전하는 열정가

자신의 역량 강화가 조직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



HUMANIST(人)

배려하는 KAPE人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재



현직자
인터뷰

열심히 준비한 우리 모두, 일투플러스(1++)!



홍지현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홍보처 대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홍보처에서 기관 홍보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사보 『KAPE in』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입사 1년 차 홍지현입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직업인 ‘축산물품질평가사’이기도 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저는 기관과 축산산업의 소식을 알리는 사보 『KAPE in』 발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께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벤트, 뉴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축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기준을 제

시한다는 점에서 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국내 축산 분야의 미래 방향을 설정할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지원했습니다.

학창 시절 도움이 됐던 활동·경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학창 시절 축산학을 전공하며 많은 활동을 했는데, 축산농장 실습이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직접 축사에서 일해 보고 출하하는 과정을 보며, 농장의 경영방식과 축산물 유통 체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관에서 일하며 많은 농장주님을 만나 기관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기관의 사업과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 직무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말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콘텐츠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중함과 감각입니다.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할지, 어떤 시기에 대중에게 선보일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중 취향을 저격하는 감각적인 기획력이 돋보인다면 금상첨화죠! 또한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의견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현재 담당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기관 사업의 필요성을 체감하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이 제가 이 업무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국민과 기관 사이를 잇는 오작교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그만큼 다양한 분과 소통하러 전국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아직 초보운전이라 매번 긴장하면서 다닌다는 점입니다.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처음으로 방송 송출용 콘텐츠를 기획하고 국민께 첫 선을 보였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떤 스토리로 어떻게 구성을 전개해 나가야 시청자가 가장 흥미를 느낄지, 그러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기관 사업을 소개해야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지 준비하는 내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콘텐츠 공개 당일까지 마음을 졸였지만, 대중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기관 사업을 많이 기억해주셔서 정말 보람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입사 이후 회사생활과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인식 속 공공기관은 일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보수적인 기관 이미지로 조금은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사하고 느낀 공공기관은 그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고 미래 지향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활기찬 조직문화 속에서 업무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반전이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은 무엇인가요?

이 업무를 진행하며 이루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1++ 투블 한우'로 잘 알려진 '축산물등급제', 가축의 주민등록번호인 '축산물이력제' 등 기관 사업을 좀 더 많은 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축산물등급제가 '등급'의 대명사가 되어서, 이제 맛있는 식당을 보면 '별 다섯 개짜리 맛집'이 아닌 '1++ 맛집'으로 평가할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포함한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주세요.

직무의 가점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알리오(ALIO)', '나라장터' 등을 통해 기관의 현황과 사업을 미리 확인하고, 기관에 도움 될 수 있는 개인 역량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또, 직무에 대한 본인만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직무를 왜 수행해야 하는지', '왜 이 기관에 입사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생각해보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과정에 심도 있게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설이 있습니다. 고(故)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퍼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인데, 여기서 그는 '점들의 연결(connecting the dots)'을 이야기했습니다.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순간에는 관련 없어 보이던 일이 미래에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에서 고객을 대하고 VOC(Voice of Customer)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학점을 얻기 위해 등록한 농장 실습수업에서 축산업 전반의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 경험 모두가 미래에서 반짝 빛날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경험을 가진 일투플러스(1++) 인재니까요!◎



*이 글은 '2021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고졸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재한 것입니다.

유쾌한 반란

안녕하세요?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에서 보안 관리담당으로 근무하는 허성령입니다.

고졸채용에 도전하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사회에 나온 저는 한국조폐공사 입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는지, 또 현재는 어떤 유쾌한 반란들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길을 걷고 계신 취업준비생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가정환경에 대한 반란'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4살 때부터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시골 외할아버지 집에서, 중학생 때는 화장실과 욕실이 밖에 있는 단칸방 집에서, 고등학생 때는 1981년에 건축한 10평 남짓 주공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가정형편 속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래희망은 '계층 이동'이었고, 그 장래희망을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통해 이뤄보고자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 장래희망을 응원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삼성꿈장학

재단의 멘토링 꿈 장학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 2, 3학년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고, 부족했던 교육비인 도서 구매, 시험 응시비, 교통비 등을 장학금으로 충당하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인 저희 가정을 위해 반찬을 매주 보내주시는 봉사단체 덕분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삼성꿈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등 많은 지원과 선생님들의 기대를 바탕으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고졸채용에 응시가 가능한 3학년 때는 4개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었고,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공개채용에 지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필기전형에서 모두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형성된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공기관 입사의 문을



허성령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
비상보안과 대리

두드리니 어느 순간 필기전형에 합격하는 실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면접전형에 간다면 당연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말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모습과 절실함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4개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했다, 현장실습을 했다는 누구나 다 경험해 봤을 법한 내용으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면접관분들께서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부 말고 다른 분야에 열정적으로 도전해 본 경험은 없는가?”라는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만을 한 것인데 이런 질문을 받으며 불합격하니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이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의 시작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스펙이 아닌 스토리로 남들과 차별을 두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옥외광고업 사단법인 단체에서 약 9개월간의 사회 경험과 공공기관을 체험해 볼 수 있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번의 체험형 인턴 경험,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으로 만들어진 내일배움카드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배전 담당 기술자 양성이라는 3개월간의 직무교육까지... 이 외에도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등 많은 경험을 하며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셀 수 없는 공공기관 필기전형 낙방 그리고 2016년 한국조폐공사 고졸채용을 포함해 4번의 공공기관 최종면접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공공기관 입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저에게 다시 한번 한국조폐공사 입사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 한국조폐공사 고졸채용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하고 다시 도전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지원자입니다!”라고 최종면접장에서 면접관분들에게 인사를 함과 동시에 “2년 전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며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말씀드렸고, 돌아오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답변하며 면접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당당히 한국조폐공사 고졸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을 위한 ‘사회에 대한 반란’

저는 지금 4년 차 직장인이자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직장에서는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한국조폐공사 최초로 남녀통합당직제도를 도입한 담당자가 됐고, 각종 업무를 개선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멀리 보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주경야독을 실천하고 있으며 야간대학교 학사과정에서 멈추지 않고 대학원에도 도전해 또 하나의 반란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반란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반대해 뒤집는다’는 의미인데, 이 글의 제목을 ‘유쾌한 반란’이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유쾌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나은 사회, 미래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생각입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 이 반란에 동참할 수 있는 날이 얼른 다가오길 소망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 글은 '2021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고졸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재한 것입니다.

모든 목표는 100m 달리가 아닌 마라톤

방향 없이 그저 달려가기는 싫었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 주변에서 들은 성공의 기준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특정한 꿈 하나 없이 그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좋아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분야로 취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저 '좋은 대학', '좋은 회사'라는 타이틀만을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진로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부터 일주일도 넘도록 진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을 두고 왜?

며칠 넘게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금융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호기심을 느꼈고, 어머니께서 가계부를 쓰실 때면 '내가 쓸래!'를 그렇게나 외쳤습니다. 사회시간에 환율을 배울 때면 그 어떤 학생보다 재밌게 수업을 들으며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다른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외치는 성공의 기준이 '어느 회사에 갔는가?'라면, 좋아하는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좋은 회사에 갔고 나중에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낮은 길이라도 꿈을 갖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특성화고를 진학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고 몇 번이나 되물으셨고, 지금 성적만 유지해도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왜 그런 길을 택하려 하느냐고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선택이니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 10분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생소한 교과목을 배웠습니다. 생각만큼 금융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입학할 때와는 달리 초심을 점점 잃어갔고 열심히 공부



이다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 주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적이 낮은 선배가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나태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친구와 실습실에서 야간자율 학습을 하던 날,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얼굴만 얼핏 알고 있던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금융에 관심 있으니 잘 해내겠다는 꿈은 뒤로한 채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쨌든 취업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달리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저를 보시고는 10분 정도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때 초심을 다잡았습니다. 금융 분야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금융공기업에 취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금융경제과에 진학하고서는 자격 취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만 5개의 자격시험을 보다

금융공기업 입사를 꿈꾸며 정기 고사와 수행평가 준비를 하면서도 온갖 자격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이 끝나가는 겨울방학이었던 1월의 한 주에는 자격시험만 5개를 보았습니다. 월요일에는 컴퓨터활용능력 필기, 화요일에는 워드프로세서 필기, 수요일에는 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그 주의 토요일에는 ERP회계정보관리사와 ERP인사정보관리사 2급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한 해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하나만 취득했던 제가 취업할 때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매경TEST 우

수등급, 전산회계 1급 등 10개가 넘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필기 One shot, One kill

2학년이 끝나갈 때쯤 학교에서는 공기업을 고려한다면 필기시험을 공부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자가 탈락하는 전형이 필기전형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어떤 선배가 어디 기업 필기에 탈락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선배들이 필기전형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감을 잃었고, 이 길이 맞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제게 상담을 해주셨던 선생님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다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고 늘 응원해주셨고 덕분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까지의 부지런히 자격시험에 응시했고,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됐던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NCS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만큼 풀지 않으면 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쪼개서 일주일 동안 두세 권의 NCS 문제집을 다 풀었습니다.

간절함으로 매일 공부한 덕분에 제 첫 필기시험이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 시험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봉투 모의고사를 포함해 45권을 풀었고, 첫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 첫 필기시험이었고, 제 첫



면접시험이었습니다.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늘 그렇듯이 또 노력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학교 선생님, 친구들과 학교에 남아 매일 면접 연습을 했고, 자기소개서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예상 질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PT 면접을 대비해 매일 5개의 기사를 스크랩했고, 공사 홈페이지 내용과 애뉴얼 리포트, 재무제표 등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출력한 애뉴얼 리포트는 문장과 문장 사이 빈틈마다 빠곡하게 시사와 엮은 내용을 적어서 종이 가 너털너털해졌을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6급 금융일반전형에 최종 합격하며 금융공기업 입사라는 꿈의 실현과 함께 금융 전문가라는 꿈에 한 발짝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모든 목표는 100m 달리기 아님 마라톤

고졸 취업을 준비하며 주변의 시선이나 학교생활로 인한 부족한 시간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도 있을 겁

니다. 저도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했지만 지금 돌아켜보면 가장 잘한 선택이 꿈을 갖고 특성화고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금융공기업을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고졸 취업이라는 목표를 정한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큰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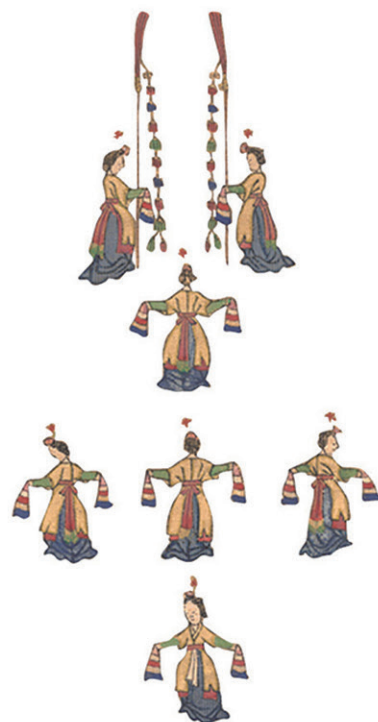
모든 목표는 100m 달리기 아님 마라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 때문에 걱정도 많겠지만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가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마라톤이니,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언젠간 결승선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각자가 목표하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나아가주세요.

저 또한 금융공기업 입사라는 목표를 이뤘으니 이제는 제가 꿈꾸는 전문가가,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달려가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비롯한 고졸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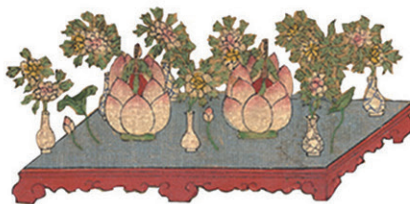




대한제국 첫 궁중 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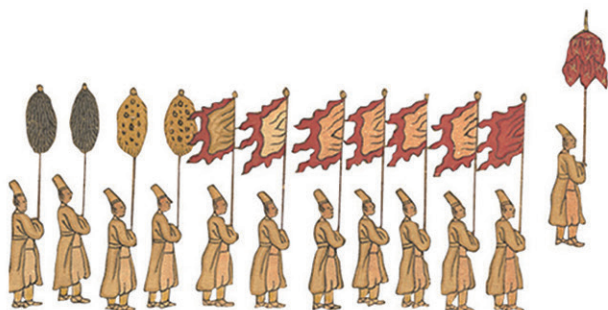
2022.
9.6. — 12.25.
tue sun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 II 202-2



THE FIRST
IMPERIAL BANQUET
OF KOREAN EMP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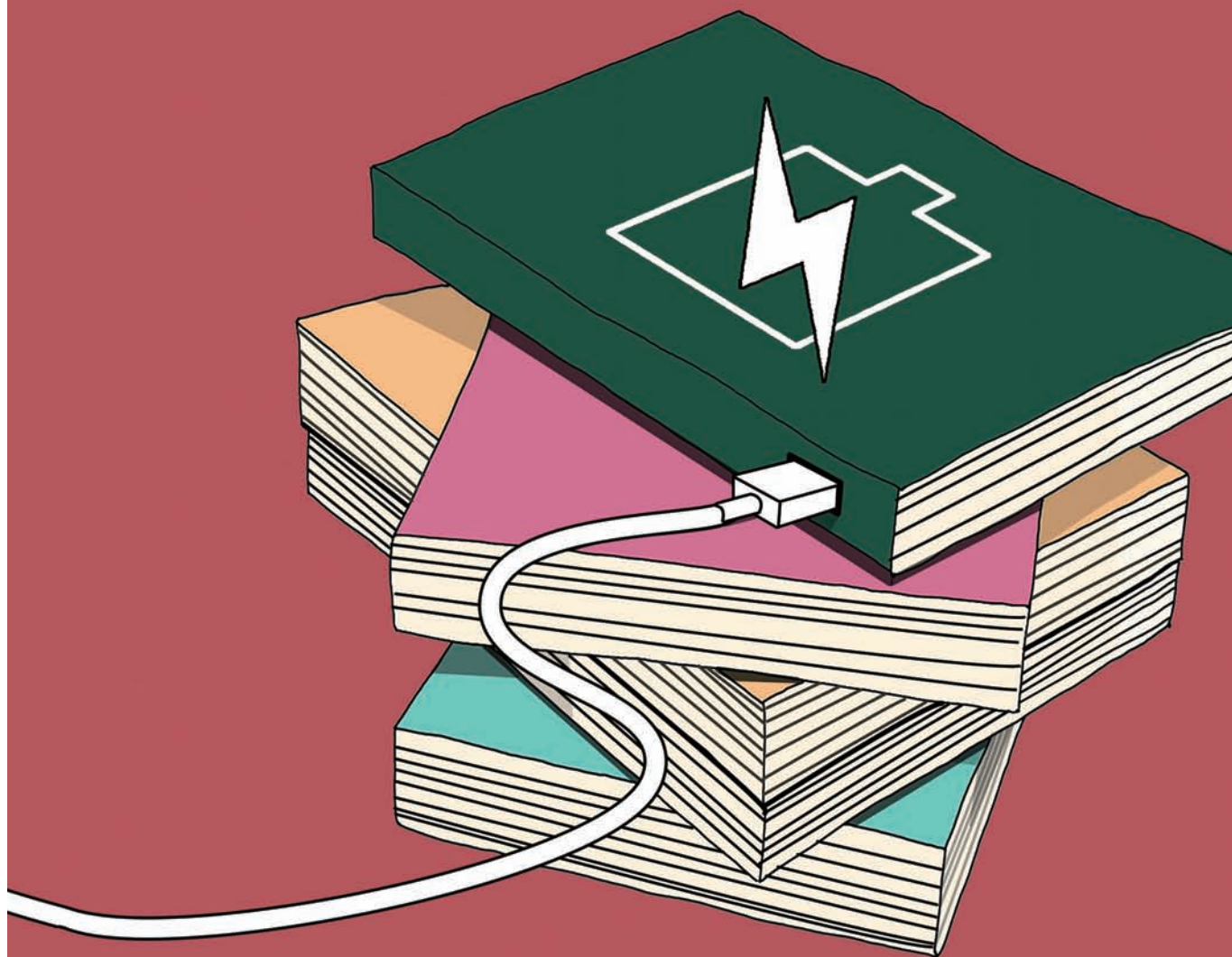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책으로충전




충전이 필요한 건
어쩌면 당신의 마음



주최·주관 | 2022년 청년 책의 해 추진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